

#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지널

Vol.21 - Spring 2016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생활공간 곳곳에서 강력범죄,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는 요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 국내 CPTED 관련 제도와 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보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나아갈 미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auri)

Design

Environmental

Prevention

Crime

Through

# 건축과 도시공간

Vol.21  
Spring 2016

발행  
2016년 3월 31일

발행인  
김대익

편집책임  
성은영

정책이슈 기획  
손동필

편집  
고효진, 이미영, 고현지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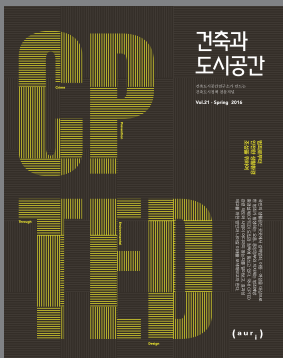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표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곳을 중심으로 파편이 확산되는  
것처럼 사소한 무질서가 심각한 범죄를 불러온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반대로, LED 가로등을 설치하여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건축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미관까지 고려한 건축설계 방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도시공간을 누릴 수 있기를 고대하며 CPTED의 효과성 있는  
실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꿈꾸다	손동필	006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조영진	012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양중진	021
외국의 침입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박현호	027

## auri 연구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CPTED 정착의 바탕을 만든다		036
--	--	-----

## 통계자료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후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는?	조영진	038
-----------------------------	-----	-----

## 건축도시동향

<b>해외동향</b>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 -지유가오카의 제이 스피릿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커뮤니티 재생 정책을 통한 환경정의의 실현	이용원	044
		신서경	050
<b>국내동향</b>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과 가능성 2016년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 선정 현대건축에 한옥의 풍경을 담다	유재욱	056
		심경미	060
		김꽃송이	064
<b>해외단신</b>	2016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외		068
<b>국내단신</b>	규제프리존 도입에 따른 입지규제 특례 내용 외		075

##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이렇게 되면 좋겠다’를 생각하는 연구소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와 건축연구소	임화진	084
--	-----	-----

## 장소탐방

역사를 끌어안은 빛의 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경은	092
무한한 가능성을 짓다 -무종력시대 대방동	이강수 · 강주형	106

## auri 소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20
· 20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126
· 2016 제1차 지식강연회 개최	127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서울시 MOU 체결	128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웨덴 민정위원회에 한국 주택정책 소개	129
· 건축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 운영 개시	130
· 『와본 김동현 구술집』 발간	131
· 『한옥 고치는 책 III』 발간	131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꿈꾸다  
006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012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021

외국의  
침입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027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꿈꾸다** | CPTED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단계이다. CPTED로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거쳐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한다면, 우리가 꾸는 꿈은 조금 더 빨리 현실화될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은 범죄예방에 대한 증가하는 사회적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 외 대다수 법령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법령 개정 시 이러한 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우리는 그동안 '범죄자의 처벌'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 왔다. 사후적 처벌보다 선제적 예방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더욱 효율적임은 자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예방 정책의 핵심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외국의 침입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 선진국 사례들이 가진 공통점은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침입범죄 피해를 당한 주택이나 취약한 서민·세입자 주택에는 최우선적으로 무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타깃 하드닝을 위한 방범인증제품을 설치해 왔다는 점이다. 침입범죄를 인적 재난 수준으로 간주하고 위험관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꿈꾸다

손동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센터장

## CPTED의 등장: 범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인식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안전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을 초부터 연이어서 발생한 강력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 등 8개 부처 합동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2015년 1월 21일

‘깨진 창문 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1980년대부터 범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무질서한 행위와 환경이 그대로 방치 되면 주민들이 그 장소를 피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잠재적 범죄자와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욕구를 증대시켜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지고 비 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된다고 한다.\* 이 이론을 포함하여 환경범죄학적 관점의 이론들에서 범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 개념이 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CPTED)이다.

\* 정진성·강용길·박현호, 「범죄예방론」, 경찰대학교, 2009, pp.73~74.

CPTED라는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지는 20년이 넘었으며, 경찰청과 CPTED학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 및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 약 4년 전 ‘소금길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시작되었고, 지자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사업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비상벨이 고장 나 있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사업대상지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업대상지가 몇 개뿐이라면 다행이지만,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CPTED 사업의 확산

CPTED 사업은 1차적으로는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꿈으로써, 2차적으로는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통 CCTV·비상벨·벽화나 자율방범 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시행된다.

좁은 골목길에는 CCTV 하나 보이지 않고 조명은 어둡침침하다.  
과거에는 마포나루를 거점으로 하는 소금창고가 많아 인심이 후한 동네로 유명하였지만  
최근 개발이 지연되면서 원주민 비율이 급격히 줄고 세입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히 유입되어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많아졌다.  
여성거주자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밤이면 상점도 거의 문을 닫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2.10.17.

서울시에서는 범죄심리학자, CPTED 분야 전문가, 경찰청 관계자, 아동청소년 전문가, 행동심리학자, 커뮤니티디자인 및 서비스디자이너 등 총 10인의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마포구 염리동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소금길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에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운동코스를 개발하여 ‘소금길’로 바꾸었고, 노란 대문과 비상벨로 대표되는 ‘소금지킴이집’을 배치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금나루’라는 주민공동공간을 만들어 카페, 마을문고, 택배수령서비스, 비상약 등 편의물품 판매와 커뮤니티아트 교육 등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 그리고 24시간 초소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소금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박경래 외(2013)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 시행 후 응답자의 범죄 두려움은 약 9.1% 감소하였고, 동네에 대한 애착감도 13.8%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250여 개의 CPTED 사업의 효과가 전부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소금길 사업이 진행된 직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효과로 인해, 그리고 사업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CPTED 사업은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250여 개의 CPTED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나 부산시의 경우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대상지도 있다.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일부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는 CPTED 전문가가 많지 않아 CPTED 계획안이 물리적인 환경개선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CPTED 계획안이 작성된다거나 졸속으로 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아 벽화가 벗겨져 흉물스러운 지역도 생겨나고 있으며, 순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소 기반의 범죄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서, 어떤 형태의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물리적인 시설물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로 포장 때문에 지워진 바닥 도색

자료: 손동필 외, 「법질서 실천운동 통합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9.



수목 관리가 되지 않아 가려진 표지판

\* 박경래 외,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p.254.



쓰레기와 전단지가 방치된 비상벨과 지도



쓰레기가 버려지고 방치된 대피소

자료: 손동필 외, 『법질서 실현운동 통합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9.

## 성공적인 CPTED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

지금까지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CPTED 사업의 법·제도적 지원 문제, 범죄 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이에 따른 낙인효과, 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방안, 갈수록 노후화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문제, CPTED 사업효과의 실증분석 등이 주로 언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그간 진행하였던 CPTED 사업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CPTED 사업 시행’을 위한 두 가지 필요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 충분한 사업 계획기간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CPTED 사업도 보통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봄이나 초여름에 용역이 발주되고 겨울에는 시공이 잘 안 되니 가을에는 용역을 마쳐야 한다. 즉 몇 개월 안에 계획과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니 계획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충실한 계획안이 도출되기 어렵다.

계획기간이 짧아짐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들이다. 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다르다. 지난달 이화동 벽화마을에서 계단 그림을 훼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민 몇 명이 입건되었다. 지역에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는 상가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소음과 쓰레기에 시달리고 프라미버시를 침해당하는 주민도 존재한다. 물론 재개발을 통해 이 지역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 사람들 모두 지역의 주민들이며, 이 지역 주민들의 최종 의견은 결국 합의를 통해 이루

어저야 한다. 이화동 벽화마을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되어 CPTED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작지 않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나 CPTED 사업이 포함된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계획기간이 3년에서 5년이다. 물론 전체 대상지 안에 소규모 사업대상지 여러 곳이 포함되어 각 대상지의 사업기간은 짧을 수 있지만, 연내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충실한 계획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업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일본 등에서는 CPTED 관련 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도시·건축·경찰행정·사회·심리·컴퓨터 분야 등이 종합된 다학제적 학문으로 자리 잡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이론 개발과 실무 적용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CPTED 사업에서는 범죄학 전문가 혹은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서로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CPTED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을 만나 보면, 한쪽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하거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한 경우에도 서로 진단과 해법이 달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계획기간이 짧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훈련, 다양한 기관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기관을 존중하며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CPTED라는 학문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척한 사람 중 하나인 레이 제프리(Ray Jeffrey)는 형법, 사회학, 심리학, 사법, 범죄학, 교정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충분한 계획기간에 이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p.6.

\*\* Randall I. Atlas,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 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2nd ed, Florida, CRC Press. 2013, p.60.



##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향한 걸음

위에서 제안한 기간과 주체는 지금까지 CPTED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즉 지속가능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CPTED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지자체별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PTED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단계이다. CPTED로 안전한 건축·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거쳐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한다면 우리가 꾸는 꿈은 조금 더 빨리 현실화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정진성·강용길·박현호, 「범죄예방론」, 경찰대학교, 2009, pp.73~74.
- 2 박경래 외,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p.254.
- 3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p.6.
- 4 Randall I. Atlas,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 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2nd ed, Florida, CRC Press. 2013, p.60.

#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도입과 주요 내용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내의 노력은 1992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을 전국 설계사무소에 배포한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2005년 경찰청이 범죄예방 원리에 따른 건축 및 공간유형별·시설물별 기준 적용에 관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때는 경찰청이 국토교통부에 ‘범죄예방’을 고려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 2010년부터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은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건물 및 시설물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수립되었다. 이 기준에서는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를 중심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배치와 공공장소·가로조경·조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사업 시행기간 중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제9조 제1항 제13호의 2)하고 있으며,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령 현황

관계 법령	개정연월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년 1월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신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1년 5월	재정비촉진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 범죄예방대책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국토기본법 시행령」	2012년 5월	도종합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12월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단계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고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13년 9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 포함
「건축법」	2014년 5월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의무 준수
「건축법 시행령」	2014년 11월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의 적용대상 구체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15년 4월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 설계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자료: 조영진·조상규·김승남,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16 참고 재작성

주민 안전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30조의 3)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28조의 2)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제30조 제4호의 2)하였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은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제5조 제2항 제3호의 2)하여 국토계획과 범죄예방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단계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제8조 제3호 다목)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계획·조성·관리 시 범죄예방의 일반원칙을 적용(제10조 제2항)하였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와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개발계획의 내용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제9조 제3호)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다.

특히 2014년에 개정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국내 건축물 건축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가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건축법」이 밝히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후 별도로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조례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추진과 동시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통적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기본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환경 디자인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 대상사업 등의 협의, 시행규칙 등을 포함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조례’는 재정비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sup>\*</sup>을 명시(제4조 제4호)하였다.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는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범죄예방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 시·군, 공공기관이 지원 또는 시행하는 건축이나 공간 조성, 도심재개발 및 각종 환경개선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추진사업, 협력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의 조항에 세부내용을 명시하였다. 이후 부산시 동래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수영구·사상구에서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근거

##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조례 및 지침 현황

소관 부처		수립 연도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제2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08	화성 동탄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장 제13·15·18·20조, 3장 제3조	단지 내 생활도로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방법설계방안 제시
		2008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2조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물·조경·조명 등에 대한 범죄예방계획 제시
		2008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	
부천시	지침	2009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지침	공동주택 및 상업·업무시설별 범죄예방 설계지침 제시
서울시	조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명시
	지침	2007	서울특별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CCTV 설치 및 개인화상정보 취급에 대한 준수사항 제시
		2008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의 개방적인 저층부 디자인 제시
		2008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주차장, 공원계획 시 시각적 차폐 지양
		2008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시설물 주변 야간조명 설치 권장
		2009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지침	범죄유형을 여덟 가지, 유해환경 요소를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4대 기본원칙과 9개 실행전략 제시
경기도	조례	2013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시	조례	2013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울산시	조례	2013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양산시	지침	2013	양산시 범죄예방 관련 환경설계(CPTED)지침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시설, 기타 시설물에 대한 CPTED 지침 제시
광주시	조례	2014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세종시	조례	2014	세종특별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소를 건축설계 시 적용하도록 명시
대전시	조례	2014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대구시	조례	2015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강원도	조례	2015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우선 적용 범위 및 활성화 사업 유형 명시

자료: 조영진·조상규·김승남,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16 참고 제작성

서울시·경기도·부산시·울산시 등을 비롯한 지자체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그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물리적인 환경디자인의 구축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범죄예방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부족하였다.

## 「건축법」 개정을 통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화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5월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를 건축물 설계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매우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건축법」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2014년 11월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61조의 3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신설함으로써 「건축법」 제53조의 2에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규정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조신설 2014.11.28.]

이후 2015년 4월 1일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였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2장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범죄예방 공통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범죄예방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물 용도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차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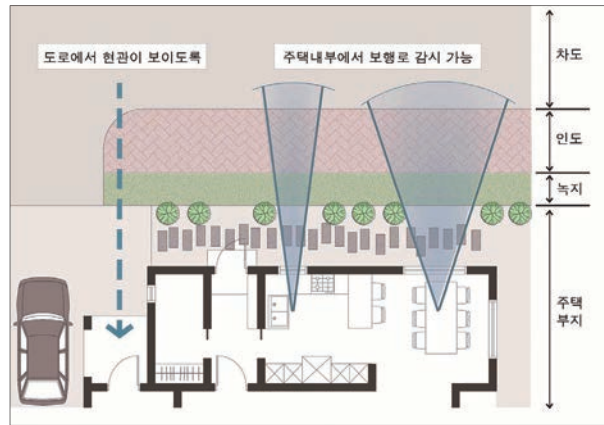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공통기준

항목	세부기준
접근 통제	보행로 자연감시 계획,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 제한
영역성 확보	공적·사적 공간 위계의 명확한 구분
활동의 활성화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외부 시설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설로 상호 연계 설치
조경	사각·고립지대 없도록 식재, 건물과 일정거리 이격
조명	출입구, 건축물 진입로와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 설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 식별이 쉽도록 조명 설치, 범위와 각도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 방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안내판	주·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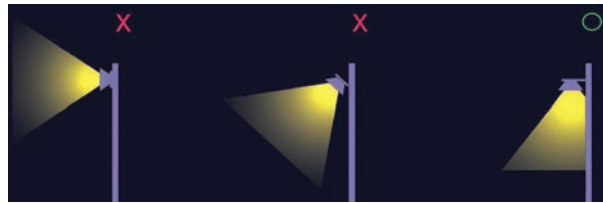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5.4.1.

##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공통기준 활용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앞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2015.4.1, p.5.



자연적  
감시를 고려한  
공간 계획



적절한 범위와  
각도로  
조명 설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 권장기준

항목	세부기준
출입문·창문	침입 방어 성능 제품 사용
주출입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계획
옥외배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조명 등	건축물 측면, 뒷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과 반사경 설치
기타	전기·수도 등 검침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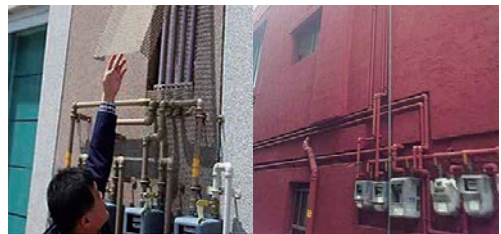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5.4.1.

##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 권장기준 활용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앞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2015.4.1, p.5.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현관문



접근통제를 위한 배관계획



##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향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를 살펴본 결과 2010년을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도입된 것을 확인하였고, 중앙부처에서는 기존의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주로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한 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즘 들어 급증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을 제외하고 대다수 법령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법령 개정 시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원리와 실천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조항이 추가·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및 범죄위험평가도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범죄예방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범죄예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범죄위험평가 및 범죄위험평가도구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사업대상지의 계획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관련 실무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위험평가 및 범죄위험평가도구 관련 규정의 추가보완이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의 유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로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 범죄는 공동주택보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택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공간환경 또한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유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법제도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공간환경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해외에서는 범죄예방 우수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노력한 건축

주와 토지주 등에게 일정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지침 등이 빠르게 신설·개정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관련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와 사업이 국민의 범죄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련 제도와 사업에 대한 기획·수행·모니터링 등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앞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2015.4.1.
- 2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5.4.1.
- 3 유광흠·조영진,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 4 조영진·조상규·김승남,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양종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과장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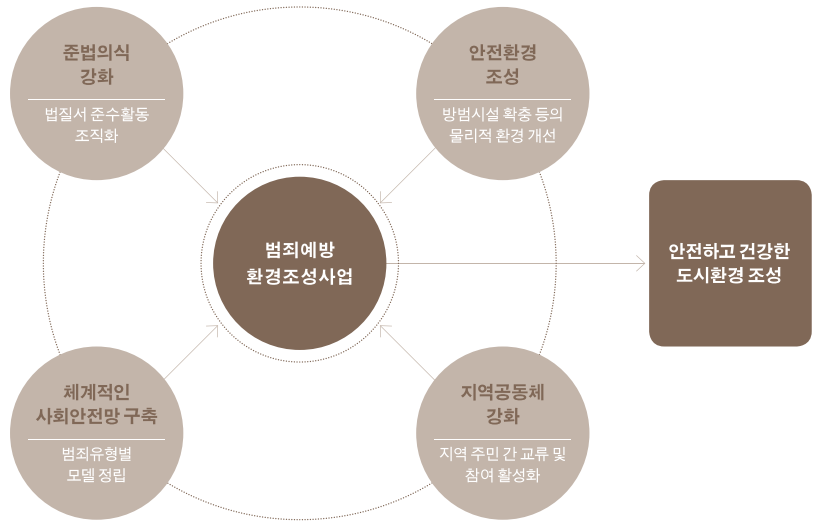
‘안전한 환경’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1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279.8%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실시한 ‘201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생활 속에서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4.5%에 달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법무부는 2014년부터 국민들의 준범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의 사업과 함께, 범죄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벌여 왔다. 이 가운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물리적 개선을 통하여 범죄의 동기와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 간 소통 강화와 준법의식 향상 등 지역공동체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화와 타협의 준법 문화를 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웃 간 갈등이 폭행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공동체의 범죄예방 역량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목적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법무부는 2014년에 14개 지역, 2015년에 11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들 지역은 범죄에 특히 취약한 곳, 사업의 성과가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곳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특히 사업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2014 · 201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지역 사업배경

2014년 대상지	사업배경
서울 마포구	· 초등학교의 흡연, 폭력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 · 벽화작업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한 분위기 개선 필요
서울 노원구	· 원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수준 · 사업실행 가능성과 체감성과 창출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
서울 영등포구	· 외국인으로 인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 · 민·관의 바람과 노력이 강함
부산 영도구	· 마을 주변에 조성된 돌레길 안전 보호 대책 필요 ·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대구 달서구	· 굴다리 내 조명 및 벽면 낙후 · 벽면 분위기 개선 필요
광주 남구	· 범죄피해 발생이 빈번한 전형적인 서민주거 밀집지역 · 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반 양호
대전 중구	· 야간 시간대에 범죄발생 우려 높음 · 성매매업소 주변의 계도·순찰 활동 강화 및 음주소란행위 단속 강화 필요
경기 구리시	·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방치되는 공가가 급증 · 해당 지역에 CCTV 설치 및 관리 필요
경기 여주시	· 여성·아동의 야간 통행시 불안감 야기 ·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세밀하게 수용하여 사업 추진 및 기획
충남 논산시	· 등·하교 시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 학교·학생과 지역주민 간 관계개선 및 선도 프로그램과의 연계
울산 남구	· 방치된 공·폐가의 수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불안감 감소 필요 · 지역 특성상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
충남 천안시	· 학교 폭력 및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 지자체의 참여의사가 매우 높아 사업 효과 기대
제주 제주시	· 구도심 공동화로 낙후된 주택과 공가가 혼재되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 ·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시적인 성과 예상
경기 부천시	· 가스배관이 창문과 근접한 위치에 노출되어 있어 침입절도 가능성 높음 · 기존 시설 활용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참여의지가 높음

2015년 대상지	사업배경
경기 수원시 (매교)	· 강력범죄 발생지(박○○ 토막살인사건) · 가로등, CCTV 등의 부족으로 범죄 취약지역 다수 존재
경북 포항시	· 주민들의 높은 범죄 불안감 · 사업전락 및 계획의 타당성이 높아 사업종료 후 모범사례 창출 가능
서울 동작구	· 대상지 범죄발생률과 기초질서 위반사례의 증가 추세 · 지자체, 주민, 경찰, 유관기관 등 지역협의체 구성 필요
전북 남원시	· 구 남원역사의 유희부지와 역사 앞 유희가지역으로 인한 높은 범죄위험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협의체 구성
경기 부천시	· 명확한 지역 커뮤니티 운영계획
경남 창원군	· 지역주민의 높은 범죄 불안감
경기 안산시	· 2009년 다문화특구 지정 및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 ·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인해 사회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 증대
경기 평택시	· 주거 쇠퇴지역으로 폭력범죄 다수 발생 · 경기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너지 효과 기대
서울 성동구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노상범죄의 위험성이 높아 거리환경 개선 시급 · CCTV, 비상벨 등 자체사업의 추진경험
경기 파주시	· 거리 환경개선 시급지 · 담당공무원의 높은 전문성
경기 양주시	· 공원 내 CCTV 파손, 화재 등 청소년 탈선행위 다수 발생

## 대상지의 문제점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서울 노원구)

대상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로티 주차장 범죄가능성</li> <li>여성 범죄 노출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인접 골목길 범죄 발생</li> <li>시장 내 낮은 화소의 CCTV</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CTV, 비상벨의 가시성 부족</li> <li>CCTV 부족 및 촬영범위의 한계</li> <li>지주 및 적재된 쓰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목길 사각지대로 인한 범죄발생 가능성</li> <li>노출된 가스 배관으로 침입범죄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시설물의 미비한 관리</li> </ul>
주요 사업 내용	<b>1인 가구 맞춤형 범죄예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인 SS-폴 시스템 도입</li> <li>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li> <li>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 실시</li> </ul>	<b>시장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노후화된 CCTV 교체</li> <li>상인 자율방범대 추진</li> </ul>	<b>CCTV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CTV 및 비상벨 설치</li> <li>바닥 도색으로 영역성 부여</li> <li>CCTV, 비상벨 방향 표식 바닥 도색</li> </ul>	<b>주거지 가로환경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화된 벽, 바닥 도색</li> </ul>	<b>기존 방범 설치물의 개선 및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벨 설치 및 바닥 도색</li> <li>LED 보안등으로 교체</li> <li>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li> </ul>

자료: 유광흠 외, 법질서 실천운동을 위한 사례지역 계획안 작성 및 모니터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127.

서울 노원구의 경우 현황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인근에 재래 시장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1인 가구 대상 강력범죄 예방 및 시장 주변 절도범죄 예방'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절도 예방을 위한 시설 및 가로환경 개선, 방범시설 신설, 자율방범대 조직, 주민 상대 범죄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2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의 '깡이부리마을'을 시작으로 앞으로 5개의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안전마을 사업'과도 연계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국민안전처는 '안전'의 관점에서 각 부처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총 12개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 2월 깡이부리마을, 법무부 - 국토교통부 MOU 체결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업성과를 단기적인 결과만으로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사업 대상지 14개 지역 중 주요 9개 지역\*에 대해 관할 지구대별로\*\* 2015년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6개 지역에서 사업시행 전(2010~2013년 평균)에 비해 절도 범죄의 발생률이 평균 1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주민 비율이 사업시행 후 1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키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방법 시설물의 점검과 개·보수 주체가 불명확하여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 종료 후 관리를 위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설치된 시설물들이 사후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들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주민 간 소통 강화와 공동체의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여성가족부는 아동·여성 안전지역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러한 개별 사업 주체의 노력을 조화시켜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 낼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서울 마포구 도화동, 노원구 공릉 1동, 부산 영도구 청학 1동, 대구 달서구 상인동, 광주 남구 월산동, 대전 중구 유천 1동, 구리시 인창동, 여주시 흥문동, 논산시 부창동

\*\* 사업대상지의 행정구역과 관할지구대의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성과의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사업 후 오히려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3개 지역의 절도 범죄 증가율은 5.1%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조상규 외,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우리는 그동안 ‘범죄자의 처벌’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 왔다. 하지만 사후적 처벌보다 범죄의 선제적 예방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예방 정책의 핵심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유관기관,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1 유광흠 외, 「법질서 실천운동을 위한 사례지역 계획안 작성 및 모니터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 2 조상규 외,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 3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



# 외국의 침입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박현호  
웅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왜 침입범죄 예방이 중요한가?

범죄 중에서도 침입절도(burglary)는 주택·건조물·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것으로, 2014년도 범죄백서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의 침입절도 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도의 지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2013년은 16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절도 범죄 중 침입에 의한 절도는 약 32%로, 다른 유형의 절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도구 등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 전문 범죄꾼이건 상황적으로 우연히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이건, 주택이나 건축물로 침입하는 행위는 단지 절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빈집털이를 하려고 건축물에 침입했다가 여러 상황(빈집인 줄 알았는데 성인 남성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방어를 해 오는 경우나 여성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등)을 접함에 따라 공격성이 촉발되거나 연동되는 범죄심리 변화로 인하여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도에 강간이나 성추행 사건 1만 9,649건 중 20%가 주거침입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는 상관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게다가 범죄학적으로 볼 때 침입범죄는 공식 범죄통계만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피해의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침입범죄 피해자의 신고 비율은 3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여러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다. 이렇듯 신고하지 않은 범죄건수를 암수(dark figure)라고 하며, 이러한 범죄암수를 고려할 때 2012년, 2013년 전국적으로 입은 침입범죄 피해는 30만 건에 가깝다.

침입절도의 발생 건수(2006~2013)

연도	공식 건수	암수 추산 건수	지수
2006	65,255	215,363	100
2007	72,911	240,630	112
2008	73,603	242,914	113
2009	81,036	267,446	124
2010	80,083	264,300	123
2011	77,335	255,231	118
2012	91,093	300,637	170
2013	87,069	287,356	163

자료: 2014 범죄백서

2012년 1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 주민 1,808명을 대상으로 범죄불안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두려운 범죄는 단연 침입범죄(25.7%)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국민이 가장 빈번히 당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가 바로 침입범죄인 것이다.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봉천동 주택 세 자매 살상사건이나 서진환의 주택가 주부 강간살인사건 등 많은 이목을 집중시킨 강력사건들도 침입범죄로 벌어졌다. 그리고 범인들은 범행 당시 도구도 없이 아주 쉽게 침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국제표준인 ISO 31000을 근거로 이 침입범죄를 사회의 한 위험(risk)으로 규정할 때 발생 빈도(확률)와 그로 인한 여파(경제적 영향, 심리적 영향)가 모두 최고 수준인 최고 위험도(highest risk)를 나타낸다. 이러한 범죄위험(crime risk)을 그 위험의 수준과 요인, 특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예

\* 박현호, 「방법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 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6호, 2013, pp.255~292.

측·분석·측정(평가)하고 이를 비용효과적인 자원(돈·인력 등) 투입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경감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ISO 31000에서는 소위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최고 수준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하고 그 수준에 맞게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투입하여 빈도와 여파를 경감하여 왔는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자원 투입은 거의 없고 방향도 많이 틀렸다. 물론 그러한 침입범죄를 문제시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접근방법이 전혀 문제를 경감시키지 못하였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합하여 방법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공공장소 방법카메라는 2002년에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5대를 설치한 후 최근에 14만 대까지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은 주택가에서 침입범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응해서 가스배관에 오일이나 특수 형광물질을 바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침입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파트 셉테드(CPTED) 인증이 이루어지고, 지자체와 경찰은 물론 법무부까지 나서서 각종 셉테드 사업을 수백 개나 쏟아내고 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CCTV이겠지만 그 외에도 안전비상벨·반사경·가시적 표지판 설치, 담장 및 도로 도색, 벽화, LED 조명 개선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과 많은 행정력 등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침입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단순하다. 건축물의 침입구인 창호에 대한 바른 셉테드는 타깃 강화(Target Hardening)인데, 이러한 타깃 하드닝 기법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주거평온권이 위협받는, 정부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침입범죄의 핵심적 위험 요인(factor)은 ‘문이나 창문 등 건물 개구부를 통한 접근이 너무 쉽다’는 점이다. 창살과 현관문이 잠겨 있더라도 맨발 또는 맨손으로 조금만 충격을 주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나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만으로도 불과 몇 초 만에 침입할 만한 크기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CCTV로는 침입 자체를 직접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창호의 재질 및 구조 즉, 하드웨어 자체가 이런 일반적인 공격을 받아도 수초 만에 쉽게 침입공간이 생겨나지 않고 일정 시간을 견

디며 방어하는 공격저항(burglary attack resistance) 성능을 갖추는 것이 적절한 대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언론 등을 통해 이 문제와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하게 다루어야 할 이 최우선 순위 사안을 공공장소가 아닌 개별 가구의 문제라는 이유로 셉테드 사업에서 누락시키고 방치하고 있다.

정말로 눈에만 보이는 전시행정 위주의 셉테드 사업만 할 것인가? 정작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곳에는 예산투입을 안 할 것인가? 이런 침입범죄에 대해 선진 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 외국의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제도 및 표준화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은 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창호(doors and windows), 유리, 잠금장치 등에 대한 침입저항 성능 표준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된 국제표준(ISO 16936-1&2 강제침입 방지 판유리, 유럽표준 EN 1627·1628 창문, 출입문, 셔터, 침입 강도와 저항력 측정 등급 및 테스트 등)도 있다. 영국·네덜란드·독일 등 유럽연합국들은 이러한 유럽표준을 근거로 제정한 국가표준(영국은 BS, 네덜란드 NEN)과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개발하여 제정한 단체표준(영국 BRE의 LPS 1175가 대표적)을 활용하여 창호 등의 침입저항 성능 시험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침입범죄 공격행위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택 및 상업·업무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먼저 영국은 1998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였다. 이미 20년 가까운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다. 대표적인 침입저항 성능 창호제품 인증으로는 LPCB인증과 SBD(Secured by Design)인증이 있다.

LPCB인증이란 BRE Global 산하 손실방지인증위원회(LPCB)에서 정부·경찰·기업과 함께 침입저항 성능등급 체계를 개발하여 도출된 단체표준인 LPS 1175에 의해 8등급으로 침입저항 수준을 구분하고 시험원이 등급별(Category A~G) 도구와 장비를 사용한 시험을 통하여 경보기, 문, 창문, 셔터, 잠금장치 등 하드웨어에 대한 침입저항 시간(1~20분)을 측정하여 그 성능을 인증하는 것이다. 시험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BRE가 자체 시험소에서 시행한다. 시험원이 맨몸이나 도구, 장비를 이용하여 타격·제거·절단하는 것에 저항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SBD인증은 영국 전국경찰지휘관협회에서 내무부(Home Office)와 교통지자체부(DTLR)의 협의하에 발기된 공식적인 방법디자인 인증 제도이다. SBD 성능인증은 창호 제조사에서 이를 신청하면 정부 공인시험소에서 EN 162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등의 표준화된 시험기준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이 샘플제품에 대한 성능(performance) 시험을 하는데,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에도 제품 성능인증이 있다. 문·창호 등의 침입범죄 방법 성능인증인 SKG(도어셋, 창문, 창틀 품질시험센터) KOMO인증과 SKH(목재제품 품질시험센터) KOMO인증이다. 이들은 목재, PVC, 철재의 창, 샤페, 창살, 유리, 도어, 셔터 등의 방법성능을 테스트한다. 여기서 KOMO인증(마크)이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유사한 네덜란드 국가 통합 품질인증을 말한다.

일본은 2002년 11월 25일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경찰청과 유리·필름, 셔터·도어·샤페, 자물쇠 등 9개의 건물부품 민간단체가 ‘방법성능이 높은 건물부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관민합동회의’를 설치하고, 건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한 각 건물부품의 기준 등에 대해서 검토를 거듭한 후 방법성능 시험에 관한 총칙으로 규칙과 세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방법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침입공격에 뚫리지 않고 5분 이상을 버티는 저항 성능이 있다고 평가된 건물부품 17종류 3,227품목(2013년 5월 기준)을 공표하고\*, 방법성능이 높은 건물부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통 호칭(방법건물 부품)’과 같은 ‘공통 인증(CP마크)’을 제정키로 하였다. 2005년 9월에는 국토교통성에서 운영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평가지표에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개구부의 침입 방지대책’을 성능표시 사항에 추가하기도 하였다.

호주에서는 2003년 3월에 뉴사우스웨일스경찰청, 빅토리아 경찰청, 웨스턴호주경찰청, 퀸즐랜드경찰청, 뉴사우스웨일스주택국, 호주표준원, 모나시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와 호주상공회의소, 그리고 건축부품 관련 민간전문단체들(알루미늄협회, 창문협회, 건축사협회, 주택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www.mlit.go.jp](http://www.mlit.go.jp)) 참고

산업협회, 호주보험협회, 락스미스협회, 방법창협회 등이 ‘방법문 및 방법창살’ 전문위원회(CS-023)를 구성하여 건축물, 특히 주택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법문·방법창살 내부 재질과 관련 하드웨어의 디자인 및 성능과 설치를 위한 요구사항 기준을 개발하고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제정된 국가표준이 ‘AS 5039 Security screen doors and security window grilles(방법문·방법창살 내부 재질과 관련 하드웨어의 디자인 및 성능)’, ‘AS 5040 성능인증 제품의 설치에 관한 시방’이며, 보다 상향된 침입저항 등급과 수준을 다루는 표준인 ‘AS 3555.1 건물부품- 침입 저항 시험 및 등급’ 등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가표준에 따라 다양한 공인시험기관의 엄격한 성능 테스트를 통해 인증된 제품이 판매·설치되고 있다.\*

#### 영국(SBD), 네덜란드(KOMO), 일본(CP)의 방법인증 마크 및 시험 장면



자료: 박현호, 「방법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 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6호, 2013, pp.255-292에서 그림 재인용

위의 외국 사례들이 가진 공통점은 우선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침입범죄 피해를 당한 주택이나 취약한 서민·세입자 주택에는 최우선적으로 무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타깃 하드닝을 위한 방법인증제품을 설치해 왔다는 점이다. 침입범죄를 인적 재난 수준으로 간주하고 위험관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부가 피해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구부의 침입저항 성능 표준이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9년 주택법에서 최소 3분 이상, 영국의 경우 2015년 건축법 개정으로 최소 1분 이상 방어해야 한다.

\* [www.saiglobal.com](http://www.saiglobal.com) 참고

셋째, 건물부품 등 하드웨어의 방법성능 및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시방이나 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주택·아파트·상업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방법성능 인증에 중요한 평가기준에 창문·도어·잠금장치 등 하드웨어의 인증제품 사용이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건물과 건물부품(창호) 간 방법성능에 연계성이 있는 것이다.

##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발전 방향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준들이 없지는 않다.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표준들을 참고하여 이미 몇몇 국가표준 KS(기계에 의한 정하중 및 동하중 침입공격 저항 성능표준)와 단체표준(한국방법기술산업협회\* SPS-SDT-000 : 2044 방법문, SPS-SDT-0001-2056 방법창살, SPS-SDT-0005 창호용 잠금장치 등 시험원에 의한 침입공격 저항 성능 표준), 그리고 학회·협회의 각종 자율인증표준(문, 창, 창살, 망창, 잠금장치)들이 제정되어 방법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까지 출시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방법창살과 방법용 망창(mesh, 방법기능을 하는 방충망) 인증제품이 판매를 시작하였고, 잠금장치 등에 대해서는 인증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과 유사한 체계에 의하여 등급화된 침입저항 성능 시험 및 인증 시스템을 갖추었으므로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인증된 방법문과 방법창(살) 등이 조속히 보급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걸림돌은 개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방법시설 설치를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과 근거는 셉테드 사업을 주관하고 공동으로 협력하는 양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면 된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두 축이다.

먼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근 1~2년 동안 1회 이상 침입범죄 피해를 입은 가구가 설치의 최우선 순위일 것이다. 침입범죄는 성격상 반복적 피해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택의

\* [www.sdtkorea.or.kr](http://www.sdtkorea.or.kr)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함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200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2006.html) 참고



주변에 피해주택과 유사한 건축환경을 가진 주택이나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큰 주택들이 차순위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주인이나 세입자에 관계없이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해주되 소득 수준에 맞춰 차등 지원해 주면 된다. 즉 극빈층의 경우 무료로 설치해 주고, 중산층은 일정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는 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다. 실제 설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화재발생 시 건물 안에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제품이 일정 비율로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혹자는 감지기와 경보장치를 부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감지기와 경보장치는 오작동이 빈번하고 그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특히 거주자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감지기와 경보장치를 해제하고 있어야 한다. 사용하는 데 한계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창호 하드웨어 자체가 공격 저항 성능을 가져야 하고, 감지기나 경보기는 부차적인 옵션으로 보아야 한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건축법」을 개정하여 창호의 침입저항 성능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면 된다. LH공사를 통해 건설되는 공영주택이나 공공건축물들에 우선 적용한 후 이를 민간 건축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어떠한 방법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뚫리고 범죄총량 불변법칙에 의해 결국 피해는 그만큼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범죄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문 범죄자(재범자)보다 범죄 경험이 없는 초범자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형사정책연구원 등이 교도소 재소자(209명)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계획적으로 도구를 준비해서 건물에 침입하려는 범죄자들조차 침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범죄를 단념하거나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방법인증 시설이 있을 경우 아예 침입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범죄성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침입이 너무 쉬워 보여서 충동적으로 저지르던 범죄 행위들을 막아줌으로써 영겁결에 전과자 신세가 되는 일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침입범죄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전술한 침입범죄의 빈도를 실효적으로 경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와 방안」, 연구총서 08-00, 2008.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에 머물러 있거나 외출할 때 가지는 침입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편 어느 장소에서 범죄가 어려워지면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범죄전이현상, 소위 풍선효과는 기우에 불과하다. 국내외의 연구사례를 보면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고 통설이다. 나아가 시계열적 연구들은 방범성능인증 창호를 설치함으로써 달성한 범죄 경감효과는 시간이 흘러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침입 방어성능 인증제품의 보급이 하루빨리 확산되어 너무 쉽게 침입범죄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대폭 줄어들고, 집에 있거나 외출을 할 때 더욱 마음 편하게 주거의 평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참고문헌

- 1 박현호, 「방범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 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6호, 2013.
- 2 박현호,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2014.
-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와 방안」, 연구총서 08-00, 2008.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연구센터

## CPTED 정책의 바탕을 만든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CPTED 관련 사업의 기반이 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에 대해  
지속적·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CPTED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보다 ‘큰 그림’, ‘오래 갈 그림’을 그리고 있다.

### 불안(不安)한 한국, 해답을 찾다

생활 가까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절도와 폭력으로 우리의 삶터가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사고가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쇠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데 있다.

몇 년 전부터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하 CPTED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 2014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추진한 CPTED 사업의 경우, 강간과 절도범죄는 평균 11.48%, 13.01%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약 17% 증가하고, 전반적인 지역환경 인식은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CPTED 정책 연구와 사업 지원의 거점

이러한 성과를 장기적·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관(지자체, 경찰, 검찰, 시민 등)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범죄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CPTED 사업에 이용할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CPTED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2016년 1월 1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가 출범하였다. 센터는 범죄예방과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지자체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거시적 관점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주요 연구 분야

#####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지원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사업 지원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사업 현황 파악
-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실무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지원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사례조사
- 범죄예방 관련 인증제도 조사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범사업 대상지(서울 공릉동, 광주 월산동)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의 주요 활동

### 크게 세우기 위한 초석을 다지다

설립 첫 해 센터는 CPTED 사업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CCTV나 벽화 중심으로 진행되던 CPTED 사업을 넘어, 지역의 범죄특성과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에 적합한 CPTED 사업 계획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공 후에는 지역의 범죄율 감소, 지역 주민의 범죄 불안감 감소, 지역에 대한 애착도 증가 등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외국의 제도 및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디자인을 연구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별법 차원에서 범죄예방이나 CPTED 관련 내용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CPTED 관련 체계적인 법제도가 아직 없고, 대부분의 디자인이나 가이드라인은 미국·호주·유럽 등 선진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는 한때의 유행으로 반짝했다가 사라진 사업들이 많다.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모두 골몰했지만 체계 없이, 단기적 관점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큰 이유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국내의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 다양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CPTED 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다.

###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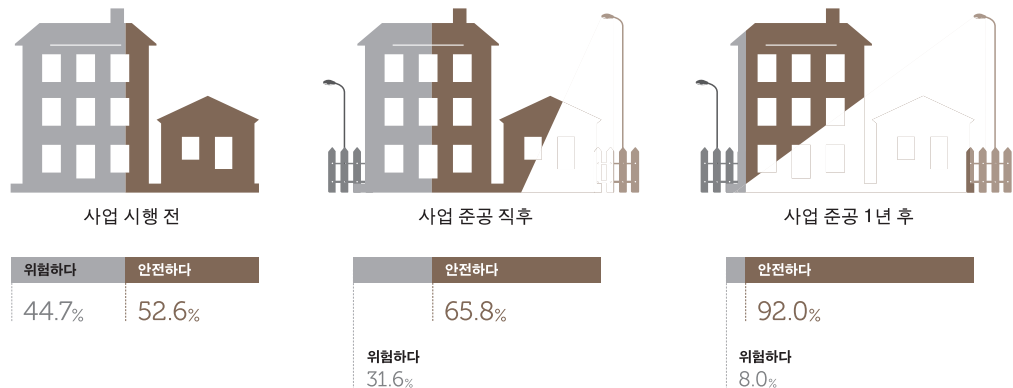
-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2015)
- 법질서 실천운동 통합모형 개발(2015)
-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방안 연구(2015)
- 서울시 옥아안심 공동주택 및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운영방안(2015)
- 법질서 실천운동을 위한 사례지역 계획안 작성 및 성과분석(2015)
-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발간(2015)
- 2014년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 추진(2014)
-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방안 연구(2014)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마련(2014)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2012)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2012)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후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4년 시행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지 중 3곳\*을 선정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사업 이후 주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 사업 준공 직후, 사업 준공 후 1년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통계자료실에서는 세 지역 가운데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의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소개한다.

### Q 거주 지역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느끼게 되었을까?

거주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변화



### A 사업 준공 후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늘었으며, 준공 1년 후에는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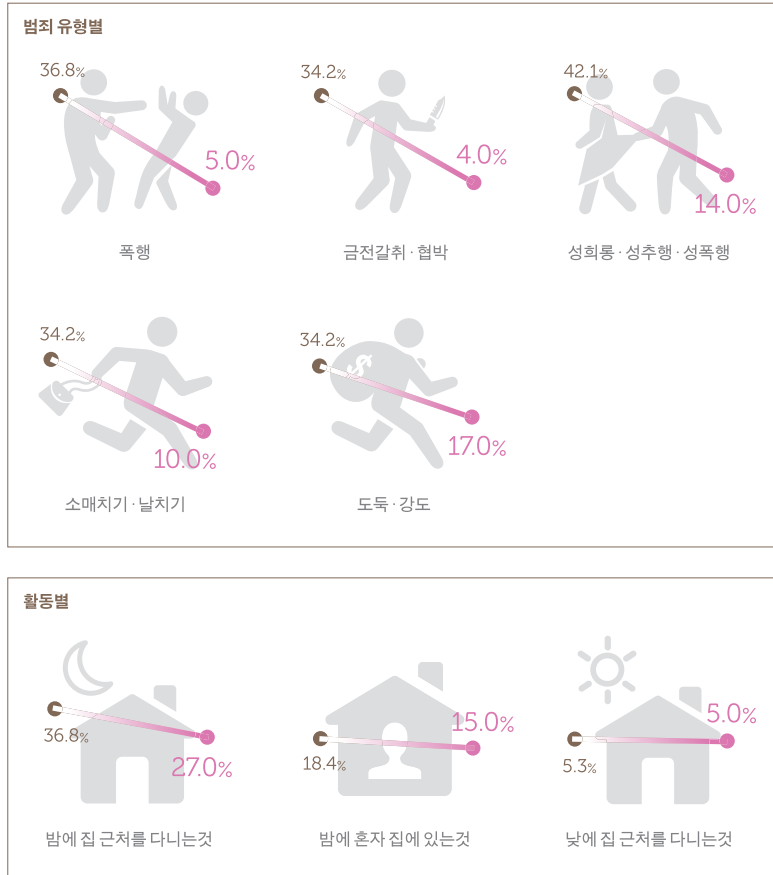
지역 주민이 느끼는 거주 지역 범죄 안전은 사업 시행 전 평균 52.6%에서 사업 준공 직후 65.8%, 사업 준공 1년 후 92%로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시행 전과 준공 1년 후 거주 지역의 범죄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물리적 프로그램(CCTV 설치 등)에 대한 거주민의 인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부산시 영도구 청학1동

❓ 범죄 피해에 대한 범죄 유형별 · 활동별 불안감의 변화는?

범죄 피해 불안감  
정도 변화

■ 사업 시행 전  
■ 사업 준공 1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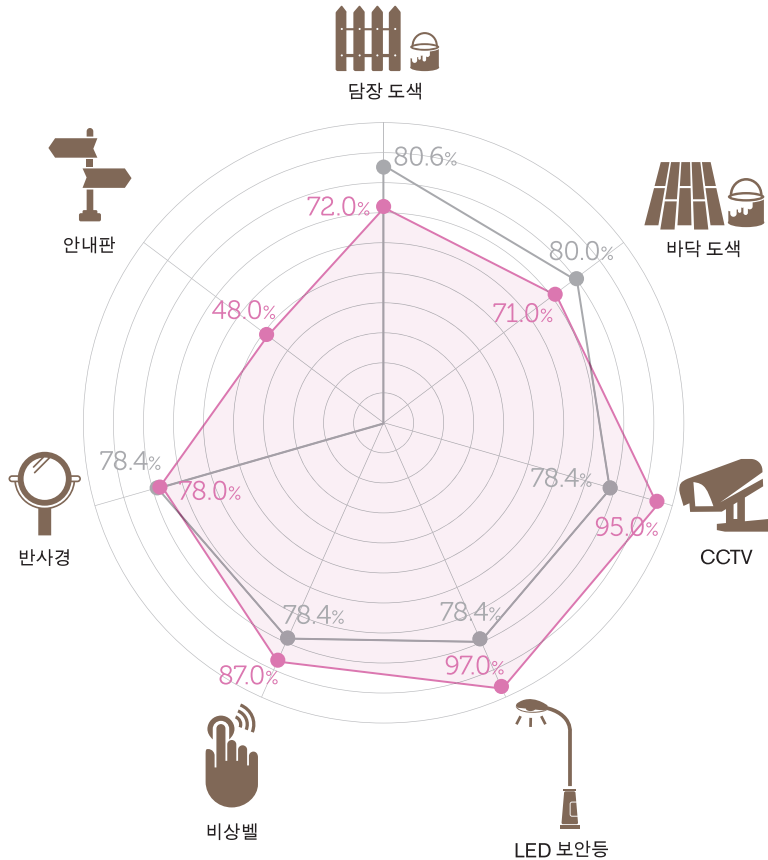
㉠ 사업 시행 전에 비해 준공 1년 후 현저하게 감소

범죄 유형에 따른 불안감은 폭행, 금전갈취·협박,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순으로 줄어들었으며, 야간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상지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주로 공적 공간(도로 등)에 도입되어, 공공공간에서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Q 사업 프로그램별 범죄예방 효과를 평가한다면?

사업 프로그램별  
범죄예방 효과성 평가

■ 사업 준공 직후  
■ 사업 준공 1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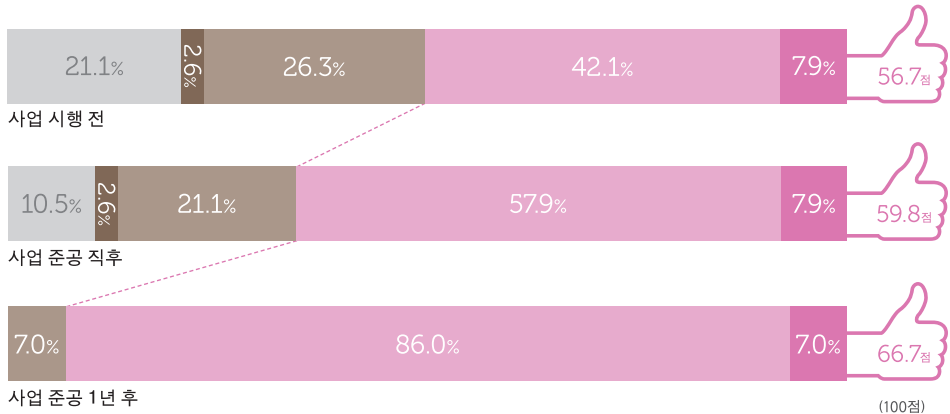
A 대부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담장 도색', '바닥 도색'의 경우 사업 준공 1년 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

준공 1년 후 주민들이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LED 보안등'(97%)과 'CCTV 설치'(95%)이며, '담장 도색'(72%)과 '바닥 도색'(71%)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 사업들은 준공 직후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상승하였다. 조사대상지 3곳에서 공통적으로 '담장 도색'과 '바닥 도색'은 사업 준공 직후 효과가 높았으나 준공 1년 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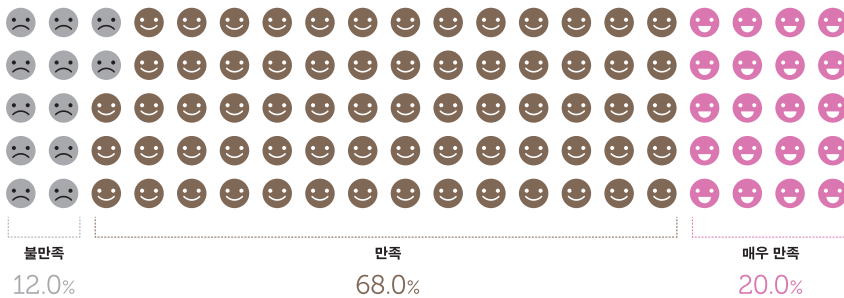
Q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 지역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 무응답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A 사업 시행 전, 준공 직후보다 준공 1년 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사업 시행 전 주민들의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6.7점이었으며, 사업 준공 직후 59.8점, 사업 준공 1년 후에는 66.7점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또한 88%로 높은 편이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타 도시 관련 사업에 비해 소요 예산과 시간이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고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된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 21

Spring 2016

#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 해외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  
-자유가오카의  
제이 스피릿 사례를 중심으로  
044

미국 커뮤니티  
재생 정책을 통한  
환경정의의 실현  
050

## 국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과  
가능성  
056

2016년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 선정  
060

현대건축에  
한옥의 풍경을  
담다  
064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 -자유가오카의 제이 스피릿 사례를 중심으로** | 최근 지방도시의 원도심 재생, 재래시장 활성화 등 쇠퇴한 중심 시가지나 상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주체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축하여 행정이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를 이룬 타운 매니지먼트의 성공적 사례인 일본 자유가오카의 제이 스피릿에 대하여 알아본다.

**미국 커뮤니티 재생 정책을 통한 환경정의의 실현** | 환경정의는 누구나 균등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정의에 근거를 둔 개념이다. 최근 소득과 인종 등에 따른 주거·업무지역의 구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커뮤니티 재생 정책을 통한 도시 및 환경정책과 이를 통한 환경정의의 실현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과 가능성** | 공간정보는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최근 각종 정책·서비스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등장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 선정** |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개별적 사업 추진과정과 지자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관리와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토경관을 개선하고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자체 대상의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축에 한옥의 풍경을 담다** | 현대적 편의성과 생활환경의 가치가 주목받는 요즘, 한옥은 현대기술의 접목과 수용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축과 한옥이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모해 온 한옥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

지유가오카(自由が丘)의  
제이 스피릿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원  
수도대학교교 도시환경과학과  
박사과정

전통시장은 한 지역 주민의 삶의 모습과 정서, 곧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다. 주민들이 모여 지역 특산물을 거래하는 등 사회·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형 쇼핑몰 이용과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오랜 시간 지역 고유의 가치를 보존해 온 전통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다.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비롯하여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도입 등 정책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일본의 타운 매니지먼트이다. 일본의 타운 매니지먼트 역시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중심시가지의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외에 신도심과 대형 쇼핑몰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경쟁에 밀려난 원도심의 중심시가지가 급격히 쇠퇴하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심시가지를 살리는 일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그런 판단에 따라 1998년 ‘중심시가지의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하여 타운 매니지먼트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무교동 일대의 낙후된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의 롯본기 힐즈와 마루노우치 등을 벤치마킹한 타운 매니지먼트가 도입된다는 기사\*가 최근 등장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타운 매니지먼트 성공 사례로 특히 메구로구(目黒区)에 위치한 지유가오카(自由が丘) 지역을 들 수 있다. 지유가오카의 마을만들기 회사인 ‘제이 스피릿’은 2012년 국토교통성 도시경관 대상을 받

\* 매일경제, “서울시 ‘타운 매니지먼트’ 용역 착수…청진·공평동 등 청계천 인근까지 확대”, 2016.01.17. (<http://news.mk.co.kr/newsRead.php?no=44812&year=2016>)

## 마을만들기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

분류	주요 사업 내용	
물리적 측면	시설 조성	시설 조성 사업
	시설 관리·운영	상업시설 사업, 주택 조성 사업, 복지시설 조성 사업, 주차장 정비 사업, 가로·광장 조성 사업
		공공공익시설의 활용, 관리 운영 사업
프로그램적 측면		민간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서비스 제공	상업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주택 관리 운영 사업, 업무빌딩 관리 운영 사업, 복지시설 관리 운영 사업, 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 빈 점포 재생·활용 사업
		지역 교통 서비스 관련 사업
		마을버스 운행 사업, 임대 자전거 사업, 공공 주차장 사업
		상점 경영 사업(직영)
		상점 경영, 식당 경영, 기타 점포 경영 등
		이벤트 기획, 운영 사업
		축제, 각종 교실 및 강좌, 체험 사업 등
		광고 사업
		광고 등의 홍보 사업
	인재육성, 중간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 육성 지원 사업: 평생학습 봉사 육성, 창업 지원 등</li> <li>• 중간 지원 사업: 타운 매니저 파견, 민관 코디네이터, NPO·시민 활동 지원, 마을 건설 펀드 등</li> </ul>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도시 계획 및 조사 사업, 방재·방범 활동, 역사·경관·거리 보존 사업
	기타 사업	특산물 개발 사업, 신용카드 사업, 지역 통화, 관광 여행선 사업, 에이전트 사업 등

자료: 国土交通省,まちづくり会社等の活動事例集, 2012

은 데 이어 2013년에는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제2회 마을 만들기 법인 ‘마을의 안전, 쾌적화 부문’에서 국토교통대신\*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2012년 도시경관 대상은 도시의 물리적 측면을, 그리고 2013년의 국토교통대신 표창은 마을의 프로그램적 측면을 인정받은 것으로 물리적으로나 프로그램적으로 모두 성공적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글에서는 TMO\*\*로 시작된 마을만들기 회사의 주요 사례인 제이 스피릿을 대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타운 매니지먼트란 무엇인가

타운 매니지먼트는 중심시가지의 상업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업종 구성, 점포 배치, 기반시설 조성 등 물리적 측면과 상점가에서 펼쳐지는 이벤트 등 프로그램적 측면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성에 의하

면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회사의 사업은 상업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각종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지유가오카의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

지유가오카는 도쿄도의 메구로구에 위치한 상업과 주거의 혼재지역으로 지유가오카 1~3초메에는 7,200명 정도(2016년 1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다. 시부야역에서 전철로 10분 정도, 도쿄역에서 30분 정

- \*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한다.
- \*\* 중심 시가지의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은 일본의 인구 감소 등에 따라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 개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TMO는 폐지되고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의 조직이 제도화되었다.
- \*\*\* 이 글은 제이 스피릿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카야마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 中小企業庁,『TMOマニュアルQ&A』, 2001.
- \*\*\*\*\* 国土交通省,まちづくり会社等の活動事例集, 2012의 목차를 토대로 정리([http://www.mlit.go.jp/crd/index/case/pdf/120405ninaite\\_jireishuh.pdf](http://www.mlit.go.jp/crd/index/case/pdf/120405ninaite_jireishuh.pdf))



도가 걸리는 위치로 접근성도 좋고 아기자기한 상점가들과 고급 주택가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곳이다. 또 각각의 건물들이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보행자에게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연중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지유가오카가 많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자리 잡은 데는 지유가오카의 타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제이 스피릿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지유가오카의 마을만들기 회사:  
제이 스피릿

원래 지유가오카 지역은 ‘지유가오카 상가진흥조합’이 주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다 1998년 ‘중심시가지의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유가오카도 종합적인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에 의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을 책정하게 되었

다. 그리고 이 계획에 기초하여 2002년 마을만들기 TMO인 주식회사 제이 스피릿을 만들었다.

제이 스피릿은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유가 오카의 특징을 살려 ‘지유가오카다움을 계승하는 마을만들기’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동시에 양호한 거주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전반적인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제이 스피릿의 구성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제이 스피릿은 그동안 상업 지역 활성화를 주로 맡아서 담당하던 지유가오카 상가진흥조합을 비롯하여 메구로구, 도쿄 급행전철 주식회사, 도쿄 전력타운 플래닝 주식회사, 도쿄 상공회의소, 상점회 대표자, 여러 주민단체 대표자, 현지 유력 기업, 개인 유지 등의 출자로 구성되었다. 출자 비율은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유가오카 상가진흥조합이 51%를 점유하고 나머지 49%는 기타 메구로구와 지역 주민단체, 주변 회사 등이 가져 공공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지유가오카 상가진흥조합  
1963년 11월에 발족한 지유가오카 상가진흥조합은 8개의 상인회로 이루어져 있다. 출범 당시 436개 상점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약 1,300개의 상점이 소속된 일본 최대 상점가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지역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키워, 회원 점포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지유가오카 주구 주민회의  
지유가오카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지유가오카 주구 내의 주민이 지역 과제에 대하여 대화 속에서 해결책을 생각하고 행정에 반영시키거나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한다. 이 단체의 구성원 중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회 구성원 등 젊은 세대가 많은데, 상가진흥조합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지역 이벤트 등을 기획하기도 한다.

### 제이 스피릿의 주요 활동

#### • 마을 운영회의

제이 스피릿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이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제이 스피릿에 출자한 여러 단체들은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역 이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지난 2015년 11월(70회)과 9월(69회)에는 메구로구의 지구 정비 사업 과정과 국가전략특구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사업과 관련된 지유가오카의 지역 주체가 해야 할 일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2015년 5월(67회) 회의에서는 지역의 보행환경에 대한 정비, 2012년 5월(49회)의 회의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유가오카 교통

비전'의 책정과 역 앞 광장의 흡연실 파티션 파손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즉, 지역 관리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항들을 지역의 여러 주체가 협의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 • 지유가오카 지구 가로 형성 지침

필자가 인터뷰를 한 지유가오카의 나카야마 사무국장에 의하면 제이 스피릿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유가오카의 고유함을 지키는 일이다.

지유가오카의 상점가는 약 1,300개의 상점 중에서 매년 10% 정도가 새로운 테넌트로 바뀌는 등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상인이 유입되고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면 기존 지유가오카의 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지침을 만들게 되었다.

\* 近藤絵里奈, TMOを活用した地域主体のまちづくり, 早稲田大学, 2013.

\*\* 제이 스피릿 홈페이지의 운영회의 회의록 참조([www.jiyugaoka-spirit.com/](http://www.jiyugaoka-spiri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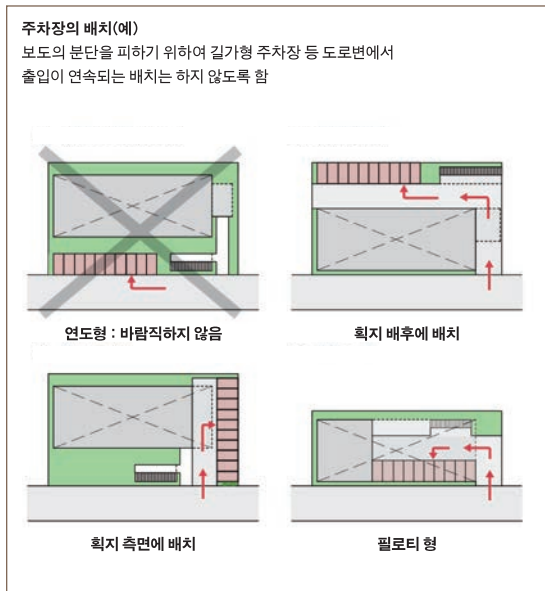


상점가의 경관 조성 지침 예시도면

자료: 지유가오카 거리 형성 지침 브로슈어



경관 조성 지침이 반영된 상점가



주택지역의 경관 조성 지침 예시도면  
자료: 지유가오카 거리 형성 지침 브로슈어

이 지침은 지유가오카의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하여 각각 그 특성에 맞게 건축물, 가로, 녹화, 주차장, 벽면, 디자인, 광고물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다. 물론 지역에서 만든 지침이기에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지역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지유가오카 교통 비전 책정

지유가오카 역 주변의 상업지역이 광역 집객을 하기 위해, 그리고 배후 주거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행 공간의 정비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제이스피릿은 교통에 관련된 여러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였다. 보행자 도로 확폭에 관한 실험, 화물차량의 노상 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실험, 자전거의 불법 주둔 대책에 관한 실험 등을 실시하고 방문객과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는 ‘지유가오카 교통 비전 2013’을 수립하였다. 이 지유가오카 비전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 보행자 우선 존(Zone)의 형성, 공공 교통시설의 조성, 교통 비전의 실현을 위한 지구계획의 전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2009년부터 산업능력대학과 연계한 ‘세장주’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세장주’는 프랑스어로 ‘그녀의 천사들’이란 뜻이다. 지유가오카에는 여신을 모티브로 한 유명 조각가의 동상이 있는데, 이 여신과 함께하는 천사란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세장주 사업은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시작되었고, 현재는 주로 마을의 안내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일요일과 공휴일 3시간 정도 유니폼을 입은 대학생들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지역을 안내하는 활동을 하는데, 대학으로서도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제이스피릿은 세장주의 연수, 유니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현지 대학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을만들기 법인 국토교통대신 표창 선정의 큰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지역 캐릭터 제작-호이푸른

지자체 단위의 마스코트는 있지만 마을 단위의 마스





©이영환

호이푸룬이 마을을 홍보하는 모습

코트는 일본에서 드문 사례이다. 2004년 지유가오카 여신 축제의 기획으로 지역 마스코트 공모전을 하여 선정한 캐릭터가 ‘호이푸룬’이다. 2009년 제이 스피릿이 상표 등록을 하였고, 2012년에는 메구로구의 명예 주민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호이푸룬은 지역의 여러 이벤트에 마스코트로 등장하고 있으며, 거리에서도 지유가오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 • 카드 대행 사업 운영

제이 스피릿의 주요 수익 사업 중 하나는 카드 대행 사업이다. 일본에서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가입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이 스피릿은 지역 상점의 신용카드 가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대행해 주고, 제이 스피릿을 통하여 가입할 경우 수수료도 낮게 책정해 준다. 그리고 제이 스피릿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고객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상점은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제이 스피릿은 이용료로 회사의 운영이 가능해지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 나오며

지유가오카의 마을만들기 회사가 실시한 다양한 프로젝트는 지역에 여러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지역 과제를 여러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동안 상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여러 주체가 참여하면서 인근의 주택지역이나 인근의 대학 등과 함께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역 활성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으로 발전하였다. 즉 그동안은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을 나누어서 전개되던 각각의 사업이 통합적으로 움직이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역 내부로의 자금순환이 나타났다. 제이 스피릿은 카드 대행 사업과 광고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단체로부터 돈을 받는 수익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제이 스피릿은 이 돈을 다시 지역을 위하여 사용한다.

일본의 주요 타운 매니지먼트는 롯폰기 힐스의 모리빌딩이나 마루노우치의 미쓰비시 등 대규모 부동산 기업의 지원을 받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유가오카는 적은 예산이지만 자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교동은 물론 지방도시의 원도심 재생, 재래시장 활성화 등 쇠퇴한 중심지까지나 상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때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축하여 행정이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지유가오카의 제이 스피릿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참고문헌

- 中小企業庁, 『TMOマニュアルQ&A』, 2001.
- 国土交通省, まちづくり会社等の活動事例集, 2012.
- 近藤絵里奈, TMOを活用した地域主体のまちづくり, 早稲田大学, 2013.
- 제이 스피릿 홈페이지([www.jiyugaoka-spirit.com](http://www.jiyugaoka-spirit.com))

# 미국 커뮤니티 재생 정책을 통한 환경정의의 실현

신서경  
플로리다대학교 도시 및 광역계획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사회적 이슈로서 ‘환경정의’의 등장

올해 1월,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the City of Flint, Michigan)의 공공상수도(the Flint River)에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던 시민들의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약 6,000명에서 12,000명 사이의 영유아가 납 중독으로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당국의 상수도 방청(anticorrosive)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주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상수도 시설의 오염원 제거에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지역은 저소득층 유색인종 밀집지역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제적 여건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지역 커뮤니티의 상황이 알려지며 학계와 사회단체에서는 인종차별적 환경정책(Environmental Racism)의 폐해라는 지적과 이러한 비인권적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방, 주, 시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적 환경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움직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이라는 틀 아래서 연방, 주, 지역정부가 협력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인종차별적 환경정책과 환경정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도시·사회문제이지만 환경 개선과 도시 개발 및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환경정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의에 근거를 둔 개념으로, 도시 및 환경정책 개발의 근간이 될 수 있다.

\* 미연방환경청에서 공론화한 환경정의란 환경정책의 발굴 및 실행 그리고 환경법률 및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국적,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와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미국 도시정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정의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환경정의에 대한 담론은 공정한 도시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을 통해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손실을 균등하게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환경정의에 대한 담론이 미국에서 발생하게 된 계기는 산업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이 특정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도시현상에서 비롯되었다. 특정한 인구통계적 특성이란 낮은 소득수준과 통계적·사회적으로 소수인종으로 분류되는 유색인종 혹은 이민자 집단을 의미하며, 미국의 북부지역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환경정의에 반하는 지역적 특성이 발생해 왔다.

산업시설의 입지적 특성(낮은 토지세와 저가의 노동력)과 이러한 특정 인구의 거주지 분포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학문적 주장과 관련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정책상 환경정의를 누리지 못하는 특정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우선시 되고 있다. 특히 '브라운필드 재생정책'은 환경정의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법안이 제정되고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지역 커뮤니티 재생의 시발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환경정의를 위한 정부정책이 미연방환경청(EPA)에 집중되었던 예전과 달리 환경정화 완료 후 경제적·사회적 재생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 도시정책 접근방법이 환경청과 주택·도시개발부(HUD) 그리고 교통부(DOT) 간에 협력을 통해서 지역커뮤니티에 제공되고 있다.

## 브라운필드의 환경적 재생과 경제적·사회적 재생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환경정의 실현

브라운필드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브라운필드'란 과거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토지 혹은 시설물을 의미하며, 오염원으로 인한 우려나 실제 오염원의 존재가 해당 토지나 시설물의 경제적 재투자과 재개발을 저해하는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브라운필드는 단순히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도시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브라운필드 주변에 거주하는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사회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브라운필드 재생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브라운필드 주변 커뮤니티의 공통된 특성은 대다수 거주민들이 저소득층의 유색인종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는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운필드의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브라운필드 재생계획 집행 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으로 환경정화와 커뮤니티 재생계획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의 필요와 요구를 장기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관점, 즉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브라운필드 재생지원 대책을 재생이 시급한 소외지역 커뮤니티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점과, 정부 기관별로 집행하고 있는 브라운필드 재생과 지역 커뮤니티 지원정책 간의 연계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정부부처 간의 정책집행이 강조되면서 미연방환경청과 주택·도시개발부는 브라운필드와 커뮤니티 재생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환경청에서는 브라운필드의 환경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지원 프로그램(the Environmental Justice Small Grants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경정의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의 시민 단체 등 제3의 기관이 브라운필드 재생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브라운필드의 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브라운필드에 존재하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브라운필드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Brownfiel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을 마련하여 환경정화가 완료된 지역의 브라운필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오염원 제거에 드는 직접비용, 토지 감가상각, 지역사업체 대상의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환경적·경제적 재생을 위한 비용과 투자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미연방정부 단위에서는 브라운필드의 환경정화와 사회·경제적 재생을 하나로 연결된 정책과제로 바라보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동시에 투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브라운필드 정책지원이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살펴본다.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 스파턴버그 시(Spartanburg, South Carolina)의

#### 추진 사례: 리제네시스 커뮤니티

연맹(ReGenesis Community-Based Organization)

2000년 미국 총인구조사에 따르면 스파턴버그 시의 아크라이트(Arkwright) 커뮤니티와 포레스트 파크(Forest Park) 커뮤니티는 저소득층 흑인 인구가 밀집한 총인구 5,000명의 커뮤니티다. 인구의 10%가 실업 상태였고, 이들 커뮤니티 주변에는 8개의 브라운필드 지역과 1개의 화학공장이 입지하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가 호흡기질환과 암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해당 커뮤니티는 시의 도시재생계획 지정구역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아크라이트 커뮤니티와 포레스트 파크 커뮤니티의 주민이었던 해럴드 미첼 주니어(Harold Mitchell Jr.)는 심각한 커뮤니티의 환경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제네시스 커뮤니티 연맹’을 발족하였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를 주변의 환경적 여건과 연관지어 해결하고자 미연방환경청 광역사무소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지역보건위생부서와 함께 브라운필드 정화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8개의 버려진 공장건물이 철거되고,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가 들어섰으며, 과거 제분소 등이 밀집하여 있던 공업단지 지역에는 커뮤니티의 보건과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리제네시스 커뮤니티 연맹이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의 향후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기본계획과 관련 규칙을 수립하였다.

리제네시스 커뮤니티 연맹의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자금 및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1990년대 브라운필드 정화를 위해 미연방환경청에서 제공한 2만 달러의 초기 자본이, 현재 약 2억 7,000만 달

리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커뮤니티 재생투자를 가능하게 한 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브라운필드 정화와 커뮤니티 재생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리제네시스 커뮤니티 연맹의 커뮤니티 재생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리제네시스 커뮤니티 연맹과 해럴드 미첼 주니어는 124개의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브라운필드와 커뮤니티 재생에 대한 성과 및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의 의지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은 브라운필드 재생과 오염원의 제거, 커뮤니티 의료서비스 증진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이는 소외되고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했던 기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커뮤니티 재생 과정에서 설립된 6개의 커뮤니티 건강증진센터는 현재도 지역구성원의 건강 관련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500채 규모의 신규 주택단지(중·저소득층 대상 주택단지, 노동자 주택, 노인주택 등)와 공원 및 커뮤니티센터는 준공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다. 특히 신규 주택단지개발계획의 경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주택국과 파트너십 체결을 맺어, 준공 후 사후 관리단계에서도 기존의 주택단지 건립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체제와 연계된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리제네시스 커뮤니티 연맹의 이와 같은 주목할 만한 성과는 지역의 브라운필드 재생 요구와 정부의 지원시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지역 리더십과 환경정의 자금 지원이 브라운필드 정화가 전반적인 커뮤니티 재생으로 이어지는 데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리제네시스 커뮤니티 연맹의 성과는 미국 도시계획가협회에서 주최하는 ‘국가 도시계획 우수 사례 공모전(National Planning Excellence Awards)’에서 지난해 ‘환경정의와 시민참여 도시계획’ 부문 수상자가 되는 영예로 돌아왔다. 다양성과 사회변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은 결과이다.

리제네시스 커뮤니티 연맹의 사례는 환경정의 실현이라는 이상적 목표를 공통분모로 하는 지역의 환경정화 및 재생의지와 연방정부의 환경정의를 위한 유연하고 협력적인 정책이 만들어낸 브라운필드와 지역재생사업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정화와 도시재생을 개별적 정책과제로 국한



리제네시스 주민건강센터 설립을 총괄 주도한 지역 리더와 연방 및 주정부 관계자들



리제네시스 프로젝트로 버려진 공장단지 재생 후 신축된 신규 주택단지 전경

자료: APA 홈페이지([www.planning.org/awards/2015/haroldmitchell.htm](http://www.planning.org/awards/2015/haroldmitchell.htm))

\* "Mitchell was successful in leveraging an initial grant of \$20,000 from the EPA's 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 into \$270 million worth of community investment".

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 커뮤니티가 환경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과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바라본 결과이다.

한편 미연방정부 단위에서는 환경정의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환경청과 주택·도시개발부 그리고 교통부가 공유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개발부는 정책 프로그램의 계획과 집행 부문에 환경정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과 응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 2014년 주택·도시개발부의 환경정의 실현 전략\*

주택·도시개발부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의의 개념과 정부 보조금 지원 기회와의 연계</li> <li>• 장소의 질적 향상을 보장</li> <li>• 환경심사기준 시 환경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적용</li> <li>•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기회를 권장</li> <li>• 북미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협의는 주택·도시개발부의 프로그램 및 정책과 연계</li> </ul>
주택·도시개발부, 프로그램 집행부서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을 배제하고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조성</li> <li>• 환경적으로 안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제공</li> <li>• 환경정의에 대한 주택·도시개발부와 공공의 이해를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의 활용</li> <li>• 북미원주민 커뮤니티의 자생적 자치능력과 주거 및 생활환경을 지원</li> </ul>
정부부처 간 상호협력적 지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내 환경정의부서 개설</li> <li>• 주택·도시개발부가 지원하는 주거단지 거주민에게 지역적 환경정의의 관심사항 홍보</li> <li>•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와 커뮤니티 조성</li> <li>• 북미원주민 커뮤니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적 활동그룹 구성</li> </ul>

\* 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nvironmental Justice Strategy: 2014 Implementation Progress Report', 2015.3.

선형적이고 개괄적인 전략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택·도시개발부 내에서도 지역의 환경정의와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과 집행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도시개발부의 자체적 전략과 정부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전략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미연방정부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과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시사점

우리나라 역시 소득과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서 주거 및 업무지역의 구분이 가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계 이민자 밀집 주거지역 혹은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 그리고 산업시설 밀집지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와 산업특성에 따른 주거 및 업무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 혹은 업무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목표와 지역의 필요 혹은 수요가 상호 소통하며 협력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정책발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미연방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서 온·오프라인의 공청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다양한 집단, 개인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청에서 집행하는 브라운필드 재생 프로그램에서는 환경정화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방안, 주민참여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집행자인 정부와 정부정책의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이 소



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때 환경정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중요한 절차로서, 산업시설이나 유흥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이 주변 커뮤니티에 미치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 혹은 민간기관에서도 환경정화와 재생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도시재생 지원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마을·커뮤니티·지역 만들기 정책이 지역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화와 도시재생을 지역 발전의 커다란 스펙트럼 안에서 바라보는 유기적 계획 접근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서별로 이루어지던 정책과제를 통합적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환경정의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는 우리나라의 환경 및 도시재생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적용 가능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PA, Making Great Communities Happen([www.planning.org/awards/2015/haroldmitchell.htm](http://www.planning.org/awards/2015/haroldmitchell.htm)), 2015.4.5.
- EPA, Brownfields Definition([www.epa.gov/brownfields/overview/glossary.htm](http://www.epa.gov/brownfields/overview/glossary.htm)), Brownfields and Land Revitalization, 2011.10.4.
- EPA, Brownfields and Land Revitalization: Laws and Statutes([www.epa.gov/brownfields/laws](http://www.epa.gov/brownfields/laws)), 2012.7.16.
- EPA, Brownfields and Land Revitalization([cfpub.epa.gov/bf-factsheets/gfs/index.cfm?xpg\\_id=3043&display\\_type=HTML](http://cfpub.epa.gov/bf-factsheets/gfs/index.cfm?xpg_id=3043&display_type=HTML)), 2015.2.25.
- EPA, Environmental Justice([www3.epa.gov/environmentaljustice](http://www3.epa.gov/environmentaljustice)), 2015.11.16.
- EPA, Superfund Basic Information([www.epa.gov/superfund/about.htm](http://www.epa.gov/superfund/about.htm)), 2013.12.24.
- EPA, What is Environmental Justice?([www.epa.gov/environmentaljustice/](http://www.epa.gov/environmental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2015.2.19.
- Timothy Fields Jr., Environmental Justice in Action([blog.epa.gov/blog/2014/08/a-dream-realized-community-driven-revitalization-in-spartanburg/](http://blog.epa.gov/blog/2014/08/a-dream-realized-community-driven-revitalization-in-spartanburg/)), 2014.8.26.
- Cory Fleming, "When Environmental Justice Hits the Local Agenda: A Profile of Spartanburg and Spartanburg County, South Carolina", *Project Management Magazine*([webapps.icma.org/pm/8605/fleming.htm](http://webapps.icma.org/pm/8605/fleming.htm)),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2004.6.
- 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nvironmental Justice Strategy: 2014 Implementation Progress Report([portal.hud.gov/hudportal/documents/huddoc?id=2014hudejprogrep.pdf](http://portal.hud.gov/hudportal/documents/huddoc?id=2014hudejprogrep.pdf)), 2015.3.
- Sangyun Lee·Paul Mohai, "Racial and Socioeconomic Assessments of Neighborhoods Adjacent to Small-Scale Brownfield Sites in the Detroit Region", *Environmental Practice*, 2011, pp.340~353.
- Sangyun Lee·Paul Mohai, "The socioeconomic dimension of brownfields cleanup in the Detroit region", *Population and Environment*, 2013, pp.420~429.
- Saha Robin·Paul Mohai, "Reassessing racial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environmental justice research", *Demography*, 2006, pp.383~399.
- Paul Mohai·David Pellow·Timmons J. Roberts, "Environmental Justice", *Annual Review of Environmental Resource*, 2009, pp.405~430.
- OSWER, Office of Solid Waste and Emergency Response, "Community Engagement Initiative"([www.epa.gov/oswer/docs/cei\\_imp\\_plan\\_0510.pdf](http://www.epa.gov/oswer/docs/cei_imp_plan_0510.pdf)), 2013.7.24.
- Manuel Pastor Jr.·Jim Sadd·John Hipp, "Which came first? Toxic facilities, minority move-in, and environmental justice", *Journal of Urban Affairs*, 2001, p.1~21.
- EPA, The Superfund Process([www.epa.gov/superfund/community/process.htm](http://www.epa.gov/superfund/community/process.htm)), 2011.8.9.

#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과 가능성

유재욱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정책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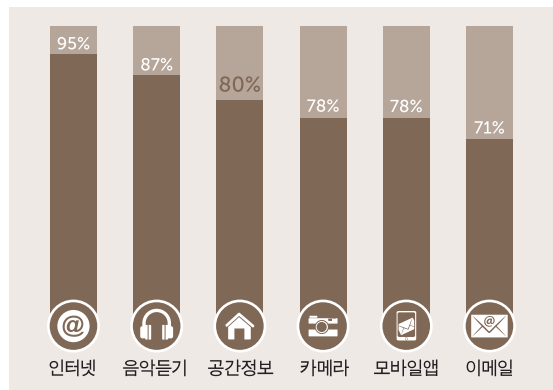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 모바일 기기 사용률도 매우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간정보는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주변의 안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도구라 할 수 있다.

공간정보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 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한 2012년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결과 인터넷과 음악감상 서비스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기능으로 나타났다.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된 공간정보는, 각종 정책 또는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개발 배경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 사망자 수와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 때문인지 한 조사에서는 재난, 안전사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약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매일 뉴스에 보도되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형편이다. 각종 재난, 안전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주요 이용 기능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분석 결과, 2013.

그동안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시설 관리 및 자체 교육 등이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여 직접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전 정책과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생활 안전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란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를 쉽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2차원 지도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와 같은 3차원 지도 형태로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기반의 생활안전지도는 그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치안안전 분야 부작용 해소 방안

범죄정보 표출범위: 도로 등 비주거지역	범죄정보 공개방식: 상대등급으로 표시
 <p>국민에게 민감한 범죄·침수 정보 등을 주거지역이 아닌 도로·공원 등 비주거지역으로 제한하여 표출</p>	 <p>시·군·구 상호간 절대적 위험도 비교를 제한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인근 읍·면·동과의 상대등급(크기)으로만 표기</p>

자료: 생활안전지도 서비스([www.safemap.go.kr](http://www.safemap.go.kr))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사업의 추진 과정

국민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추진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정보화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하여 시범 구축(2013.12.)하였다.

정보화기본계획 수립과 시범 구축을 위하여 지역 주민 설명회와 국제세미나 등을 열었으며,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이 위험지역으로 낙인찍혀 집값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참고하여 도로 중심의 비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공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115개 시·군·구로 확대 구축하였고, 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 등 추가 4대 분야를 15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였다. 또한 2013년 시범 구축 대상지역에 대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9월 30일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처음으로 국민에게 웹과 모바일로 공개하였다.

2015년에는 4대 분야에 대하여 전국 확대 구

## 생활안전지도 분야별 구축 정보

분야 (기존)	주요 내용	분야 (추가)	주요 내용
치안안전	•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등 범죄발생 정보	시설안전	• 전기화재·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통계 정보, 노후건축물 밀도 정보
재난안전	• 침수, 산불, 산사태, 지진, 화재 등 재난발생 정보 및 대피소 정보	사고안전	• 추락·낙상사고 발생 통계, 위치 정보 및 주의구간 정보 •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점검이력 정보
교통안전	•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지점 정보	보건안전	• 식중독 등 질병 및 전염병 발생 현황 • 축사, 통제초소 등 방역시설 정보 • 대기, 학교환경 구역 정보
맞춤안전	• 범죄·교통·재난 등 분야별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어린이·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지도 제공	산업안전	• 산업재해, 사망재해 발생통계 • 건설공사 현황 및 위치 정보 • 산재지정 의료기관 현황 정보

축뿐만 아니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조로 개선하였으며, ‘미세먼지’, ‘교통 돌발 정보’, ‘환경 대기오염지수’, ‘오존’, ‘방사능 수치’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일방향 서비스가 아닌 양방향, 나아가 다방향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와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안전위해요소 신고정보 및 처리현황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신고정보 서비스’를 추가하고, 2016년 1월 1일 서비스를 공개하였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신고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연계한 ‘자동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동알림 서비스는 출퇴근 및 등하굣길 시간대에 자기 위치의 안전정보 또는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 정보개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성 강화

국민안전처는 정부3.0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안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생활안전지도 포털을 통해 지역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 정보를 공개하

였고, 공동활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생활안전지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주제도 40종을 웹과 모바일 기반의 Open API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위해요소 신고를 생활안전지도 기반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Open API로 연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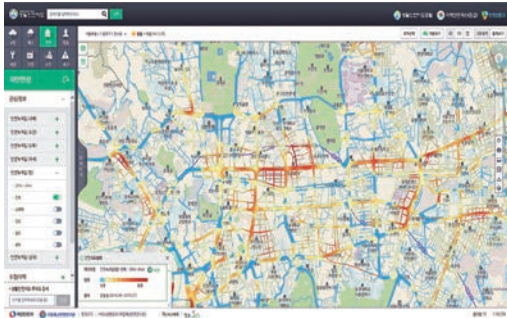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와 20여 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126종의 안전정보를 수집·통합하여 공간정보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전정보를 공간정보 형태로 공공 및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015년 6월 17일 생활안전지도 공공데이터 정보개방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번 협의체에는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국토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 20여 개 자료제공기관과 다음카카오·SKT맵·LGU+ 등 10여 개 민간기업이 참여하였다. 특히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그동안 정보개방에 대한 자료제공기관과 활용처인 민간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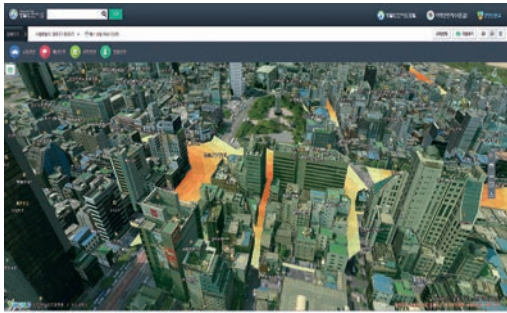
이를 통해 11월 18일 산림청과 재난정보 활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활안전지도 41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화면



생활안전지도 2차원 서비스



생활안전지도 3차원 서비스

종을 개방하고,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11종의 산림재해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이용하여 마을안전지도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경기도 등 16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생활안전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LGU+와의 지속적인 협력 속에 40여종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6년 3월 국내 최초의 보행자 내비게이션 민간서비스가 공개될 예정이며,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체인 현대엠엔소프트에도 11종의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지자체 및

자료제공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개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건축·도시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 가능성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은 20여 개 정보제공 기관과의 협업과 국가공간정보 제공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여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2차원 지도뿐만 아니라 3차원 지도까지 구축할 수 있었다. 생활안전지도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할 경우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도시 분야에서는 과거의 가시권 분석, 상권분석 등과 같은 공간분석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설계 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전정보 등의 공간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침수위험지구와 산사태위험지구 등을 파악하고, 도시관리 계획이나 건축물 관리 및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구축된 서비스이니만큼, 국민들께서 2016년부터 전국에 서비스되는 생활안전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접근성, 편의성, 추가 필요정보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생활안전지도가 국민생활 속에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분석 결과, 2013.
-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홈페이지([www.safemap.go.kr](http://www.safemap.go.kr))

# 2016년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 선정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토품격을 높여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2013년 「경관법」 개정(2014년 2월 시행)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이 영향을 미쳐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관리와 조화로운 경관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토경관을 개선하고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건축물·가로·공원과 녹지 등 개별 경관요소에 대한 통합적 계획 및 사업 추진으로 국토품격 향상과 개성 있는 지역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지역사업에 민간전문가의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 2016년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선정은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와 함께 시작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응모자의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사업의 성격과 추진 방향, 사업공모 일정과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한다. 또한 각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 소개를 통하여 각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한다.

2016년 사업 선정을 위한 설명회는 2015년 10월 15일에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는 시·도와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약 123명이 참석하였다.



©차경미



2016 지역경관 향상 사업 설명회와 우수사례 발표회 진행 모습

먼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부연구위원이 각 사업의 성격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 현재 하동군 민간전문가로 활동 중인 안재락 경상대학교 교수가 하동군 민간전문가 사업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진준호 주무관이 2016년 지원사업 공모일정과 절차등을 전달하였다.

각 사업의 2016년 신규사업 공모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다.

###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과정 계획수립(1차연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계획수립 사업 지역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국가건축위원회 추천 위원 3인

(온영태 위원, 박찬용 위원, 박소현 위원)과 과거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민간전문가 2인(이영범 경기대학교 교수, 김혜정 아키텍플랜 소장)으로 구성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계획수립 공모 결과 총 28건이 접수되었고, 대부분 경관과 원도심 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이 주요 내용이었다.

서면심사를 통해 현지평가 대상 5곳을 선정하고, 평가팀을 구성(선정위원, 국토교통부 담당자, 모니터링 연구진 각각 1~2명)하여 하루에 1~2개 지역씩 총 3일에 걸쳐 현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평가팀이 모두 참석하여 각각 진행한 현지평가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가점사항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정안을 마련하였다.

선정안을 바탕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계획수립 사업으로 총 3개의 사업(경남 밀양시, 경기 시흥시, 인천 옹진군)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은 계획수립 비용으로 지역당 1억 5,000만 원씩을 지원받아 2016년 말까지 해당지역의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 기본 및 실시설계(2차연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디자인 개선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정착 및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계획수립을 진행한 6개소(경기 고양시, 경기 광주시, 충남 논산시, 경북 상주시, 대구시 남구, 전남 강진군)를 대상으로 추진성과가 우수하거나 연속 지원의 효과가 높은 지역에 추가로 지원한다.

평가위원으로 강인호 교수(한남대학교), 장옥연 소장(온공간연구소), 김현진 소장(SPLK건축사사무소), 김영중 소장(라움플랜) 4인이 참여하였다.

성과평가 보고서와 모니터링 평가등을 통해 계획수립 상황과 실행력을 고려한 결과, 기본 및 실시설

계 대상으로 전남 강진군을 선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강진군은 1차연도 통합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세부사업 중 우선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본설계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결과

구분	지자체	사업명
계획수립 (1차연도)	경남 밀양시	산수(山水)도시 밀양 RE-디자인을 위한 "2+2" 네트워크 플랜
	경기 시흥시	다양성이 공존하는 자족적 구도심 활성화 계획 "Wannabe 신천인"
	인천 옹진군	통일한국과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는 백령 평화마을 만들기
기본 및 실시설계 (2차연도)	전남 강진군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

#### 2016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선정 과정 신규사업(1차연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건축과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운영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지역총괄계획가)를 활용하여 디자인 및 경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확보와 지자체 여건에 따라 1년 후 종료가능하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지자체 민간전문가 참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 안재락 경상대학교 교수,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으로 구성하였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신규사업 공모 결과 총 6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11일에 선정평가를 진행하였다.

선정평가는 민간전문가 운영 방안의 효율성과 적절성, 민간전문가 업무 범위 및 내용의 적절성, 행

정 지원조직 운영계획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담당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 정도와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총 4곳의 지자체(경기 포천시, 경북 고령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를 선정하여 민간전문가 인건비와 사업추진 운영비로 지자체당 3,500만 원(정액 지원)을 지원한다.

#### 연속사업(2차연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와 모니터링 팀(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2015년에 추진한 사업 중 성과평가를 통해 연속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 확산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12월 9일 성과발표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15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8곳(서울 서대문구, 경기 평택시, 대구시 남구, 세종시, 인천시 옹진군, 전북 임실군, 전북 익산시, 강원 평창군)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온영태 교수(경희대학교)와 안재락 교수(경상대학교)가 평가를 진행하였다.

성과평가는 최초 수립한 실행계획서의 이행 여부,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파급력, 지자체의 지원조직 운영 여부,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 의지 등 항목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기 평택시와 전북 임실군을 제외한 지자체 6곳(서울 서대문구, 대구시 남구, 세종시, 인천시 옹진군, 전북 익산시, 강원 평창군)을 연속사업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지자체당 2,000만 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015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사업 기획단계의 사전검토 및 관련 사업 조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 2016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선정 결과

구분	지자체	담당 부서	민간전문가
신규사업 (1차연도)	경기 포천시	기획예산과, 도시과	조치웅 삼육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경북 고령군	기획감사실(기획담당)	김혜란 도시건축 소도 부사장
	강원 횡성군	기획감사실(관광개발담당)	추용욱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충남 부여군	도시건축과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연속사업 (2차연도)	서울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주대관 (사)새건축사협의회 상임위원
	대구시 남구	도시재생총괄과	박선경 SK 건축사무소 대표
	세종시	청춘조치원과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인천시 옹진군	건축민원과	이종숙 건축사사무소 제우현 대표
	전북 익산시	도시개발과	이경찬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강원 평창군	도시주택과	백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를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합리적 재설정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준비 지원으로 기획력이 강화됨에 따라 공모에 다수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 지자체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협업의 경험 등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지자체의 디자인 행정 통합 및 조정 체계 정착과 참여형 행정 등 조직체계의 변화에 기여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 기대효과

그동안 국토 경관은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 이용, 건축물·시설물의 경관 관리 미흡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토경관을 향상시키고 공공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관계 설정,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일반화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지역의 통합적 계획과 민간전문가 참여 등 통합적 경관형성 및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단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통합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한 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 정체성이 강화된 통합적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도시·건축 분야에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총괄 조정 및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디자인 품질이 향상되고, 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경관포털 사이트([www.beautifulcounty.or.kr](http://www.beautifulcoun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대건축에 한옥의 풍경을 담다

김꽃송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최근 현대인들은 목구조, 자연재료 등 한옥 구성요소의 직설적 재현을 넘어 한옥이 가지는 생활환경의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현대적 편의성과 구조 및 환경성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하고 현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한옥을 원하며, 도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한옥은 구조와 형식, 형태와 용도가 변화하며 새로운 종의 건축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한옥의 재료 및 환경기술, 구조기술 분야는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다층한옥, 현대건축과 결합된 한옥 등 새로운 건축양식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한옥이 능숙한 장인에 의한 작품으로서 전통양식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근래에는 현대인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건축과 한옥이 결합한 사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실험을 거듭하여 변모하는 한옥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현대건축과 한옥이 결합된 새로운 건축양식의 등장

새로운 기능의 부여, 공간의 확장,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후 한옥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대건축과 한옥이 결합된 새로운 건축양식이 등장하였다. 한옥의 이미지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로에 면한 건물은 한옥으로 남겨두고 후면의 건물은 현대건축물로 대수선하거나 현대건축물로 전면 증축하고 상부에 한옥의 지붕을 덧붙인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신축 한옥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한옥의 전통적 공간과 현대적 편의성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옥이 현대건축물과 결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한옥과 현대건축이 평면적 또는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통합되는 방식과, 한옥과 현대건축이 뚜렷한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융합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다층한옥의 구현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한옥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체 건축물에서 한옥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면서 한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 현대건축과 한옥의 결합

### 수평적 결합: 함양재

함양재는 현대건축과 한옥이 수평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집은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구현되었다. 건축주는 전체 건물 중 일부는 3칸 한옥으로, 일부는 2층 규모의 일반건축물로 하면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지어지길 희망하였다. 현대적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한옥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 것이다.

서로 다른 구법과 형태를 가지는 두 건물이 이질감 없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가는 생활공간의 중심에 마당을 조성하고 안팎으로 과거와 현대가 소통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ㄱ’자 집의 현대건축은 ‘—’자 집의 한옥과 만나며 두 건물의 사이에는 마당이 위치한다. 두 건물 어디에서나 한옥이 보이는 마당을 조우할 수 있으며, 전통공간에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내부로 이어진다.

### 수직적 결합: 청운문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현대건축과 한옥이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결합된 공공건축물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면 두 개의 건물이 구분되어 보이지만 내부에서 동선이 연결된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서울 도심 속 옛 성곽길과 어우러지는 형태를 가지는 동시에 대공간이 필

## 현대건축과 한옥이 수평으로 결합된 사례



© 鄭 中 應



판교 함양재

요한 도서관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현대건축물과 결합된 한옥 공공건축물로 계획되었다.

실제로 「건축법」상의 제약과 높은 공사비로 인해 대규모 공간이 요구되는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좁은 필지에 건축선을 지키면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외벽에서 최소 90cm 이상 처마길이를 내밀어야 하는 규제를 따르다 보면 면적은 더욱 협소해지고 충분한 마당공간을 확보하기 힘들다. 게다가 한옥을 다층으로 건립할 경우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구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청운문학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수용해야 하는 대공간은 철근콘크리트조의 현대건축물로 계획하고 지상층의 일부 면적을 목구조의 한옥으로 설계하였다. 인왕산의 자연

## 현대건축과 한옥이 수직으로 결합된 사례



청운문학도서관

자료: 종로구 보도자료, "한옥 처마 아래서 문학 세계에 빠지다", 2014.11.13.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청운문학도서관은 주로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활용되던 과거 전통한옥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현대한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외부마감과 장식을 통해 현대건축과 한옥의 외관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콘크리트골조 상부와 입구 전면에 단장을 설치하여 전통적인 오브제를 차용하고, 현대건축의 입면과 한옥의 기와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감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 복합적 결합: 한방산업진흥센터

한옥의 확장 가능성은 현재 건축 중인 한방산업진흥센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방산업진흥센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대건축물과 한옥이 융합된 사례이다. 한방산업진흥센터는 언뜻 보면 전체 건물이 한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연면적의 약 10.8%만이 한옥으로 설계되어 있다. 콘크리트골조와 목구조가 혼합되고, 투시형 쇼윈도·커튼월 등 현대적 마감과 전통창호·전통기와 등 한옥의 전통양식이 적절히 융화되어 전통과 현대가 소통하는 건물로

구현되었다. 이처럼 한방산업진흥센터는 한옥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 한옥이 전체 건물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면서 방문객들이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한방산업진흥센터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한옥의 설계기법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겹겹이 조성된 마당에서 새로움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중앙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이 배치되고 상층으로 갈수록 건물과 마당이 중첩되어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전통한옥에서의 생활공간을 체험하며 건물로 출입하게 된다. 마당은 인접한 건물의 프로그램에 따라 약초마당·치유마당 등 각기 다른 테마로 조성되어 다양성을 제공한다.

한방산업진흥센터는 다층한옥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심지의 비싼 대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층 이상의 다층한옥 건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다층한옥의 완결된 형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한방진흥센터는 면밀한 구조계산을 거쳐 목재와 강관을 결합한 강구조 방식을 적용하여, 현대건축과 한옥이 결합된 대규모의 다층건물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다.

약령시장에 건축되고 있는 한방산업진흥센터는 한옥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을 특성화하고 지역 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새로운 한옥 건축물, 현대한옥의 미래

현재 한옥은 현대기술의 접목과 수용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도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옥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건축물의 일부를 한옥으로 건축하는 예가 늘고 있다. 정부는 한옥의 구조 및 환경성능, 비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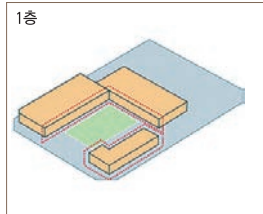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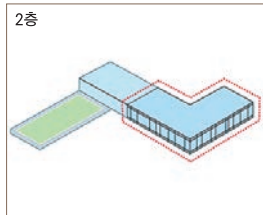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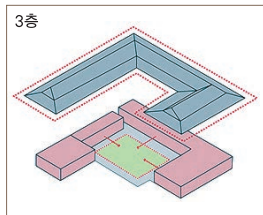


## 현대건축과 한옥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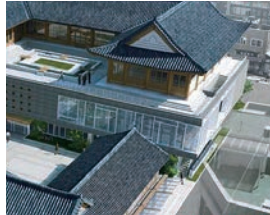


©건축사사무소 유원비

한방산업진흥센터 조감도



한방산업진흥센터 입면계획



\* 청운문화도서관은 지상층과 지하층의 구조가 상이하다. 건물에서 한옥은 26.78%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일반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를 개선하고 공공건축물에 요구되는 기능을 담기 위해 현대건축과 결합한 새로운 건축유형을 제안하거나, R&D 기술개발 성과를 적용한 신한옥 공공건축물을 건립 중이다. 이를 통하여 한옥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한옥문화를 확산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옥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한편 한옥의 모습이 다변화됨에 따라 한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축과 결합된 한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목구조의 비중을 줄이고 한옥의 이미지만 부각시킨 현대건축물에서 한옥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옥은 주요 구조가 목구조로 되어 있고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처럼 유독 한옥에는 전통양식의 보존과 계승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대한옥의 공간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옥의 전통구법보다는 한옥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의 가치에 더 주목하고, 한옥에서도 현대생활의 편의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제 한옥은 더 이상 과거 건축유형의 재현이 아니며 대중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이강민 외, 「2013 한옥건축산업 동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 이강민·오성훈·구본현·김꽃송이, 「현대한옥의 변화와 전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 국가한옥센터, 「2015 1차 한옥포럼 작품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 내 손안에 서울, “이렇게 멋진 한옥 도서관 보셨나요?”, 2014.12.1.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24844>)
- 아우름 홈페이지(<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6160#.VsPeSKRf2Uk>)
- 구가 홈페이지(<http://www.guga.co.kr/>)

## 2016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www.pritzkerprize.com  
alejandroaravena.com

2016년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가 칠레의 사회참여형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Alejandro Aravena)로 결정되었다. 프리츠커상은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며 인류와 건축 환경에 중요한 공헌을 한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 등 8명의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무엇이 진정으로 훌륭한 디자인인지를 보여준 건축가를 수상자로 선정하였다”며 “아라베나는 사회참여적 건축운동의 부활을 상징하며, 특히 주택문제 해결과 사회를 위한 도시환경 건설에 오랜 시간 노력한 건축가”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아라베나는 재료와 건축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건축물이 사용자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아라베나는 2001년부터 건축사무소이자 공공건축 프로젝트 그룹인 엘레멘탈(ELEMENTAL)의 총감독을 맡고 있다. 건축의 작품성과 21세기 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고민하는 아라베나는 저소득층에 경제적 기회 제공, 자연 재해 피해 복구, 에너지 소비의 경감, 모두를 위한 공공장소 제공 등과 같은 사회 참여형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칠레 쿄타 먼로이(Quinta Monroy) 지역의 ‘증설주택(half of a good house)’은 아라베나의 대표적 작품이다. 이 증설주택은 정부지원금으로 집의 절반을 완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이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1층과 2층의 바닥만 설계하는 형태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거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안겨 주는 프로젝트로, 거주민 스스로 창의성과 문화적 주인의식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저가 주택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증설주택



©ELEMENTAL  
(www.elementalchile.cl)

©ELEMENTAL  
(www.elementalchile.cl)



상·중 하 UC 이노베이션 센터,  
칠레 폰티피카 가톨릭 대학교  
삼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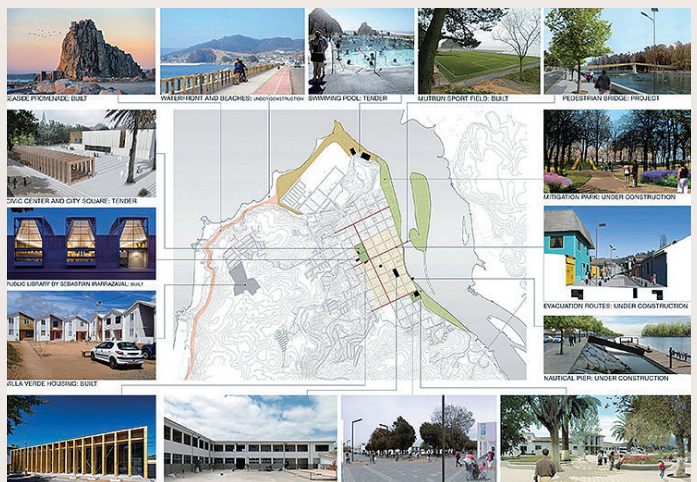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아라베나의 건축물은 특히 지역 기후를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일컬어진다. '삼 타워(Siamese Tower)'의 경우 유리로 설계해 달라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었으나, 유리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자재로 산티아고 기후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또 다른 건물을 세워 두 건물 사이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굴곡이 대류에 의한 수직 바람을 가속화하여 건물 안으로 열이 침투하기 전에 제거 되도록 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UC 이노베이션 센터(UC Innovation Center)'를 설계할 때는 지식과 지식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개방의 공간'이면서,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산티아고 기후에 적합하도록 외부를 향해 막혀 있고 내부에 강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 자연재해 복구 프로젝트

칠레의 콘스티투시온이 2010년 규모 8.8의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후 아라베나와 엘레멘탈은 콘스티투시온 재건 총괄 계획을 맡기도 하였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었다. 참여형 설계 과정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복원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내의 다양한 공공공간 확충 계획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해안을 따라 위치한 칠레가 쓰나미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와 바다 사이에 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리적 대응 방안도 고안·적용되었다.



콘스티투시온의 지속가능한 재건 계획

©ELEMENTAL  
(www.elementalchile.cl)

## 건축가들이 예측한 미래 주거 디자인 트렌드

[www.aia.org/press/AIAB107953](http://www.aia.org/press/AIAB107953)

[www.architectmagazine.com/aia-architect/aiafeature/the-coming-decade-for-residential-design\\_o](http://www.architectmagazine.com/aia-architect/aiafeature/the-coming-decade-for-residential-design_o)

[www.archdaily.com/779143/where-housing-is-headed-in-2016-according-to-riba](http://www.archdaily.com/779143/where-housing-is-headed-in-2016-according-to-riba)

[www.architecture.com/RIBA/Contactus/NewsAndPress/PressReleases/2015/RIBAheraldsHousingDesignTrendsfor2016.aspx](http://www.architecture.com/RIBA/Contactus/NewsAndPress/PressReleases/2015/RIBAheraldsHousingDesignTrendsfor2016.aspx)

### 미국 건축가협회(AIA)의 '향후 10년, 주거 디자인 트렌드' 발표

미국 건축가협회(AIA)는 지난 1월 AIA 주거 디자인 트렌드 조사 10주년을 기념하여 500여 명의 주거 전문 건축가 패널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주거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AIA CEO 커미트 베이커(Kermit Baker)는 “지난 10년 동안 주거 공간의 기능성·접근성·지속성이 큰 이슈였다”며 “건강한 건축,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하였다.

#### AIA 선정 향후 10년 주거 디자인 트렌드

자동화 기술	개인용 전자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온도, 조명, 보안 자동조절 장치와 같은 자동화 기술들의 통합이 더욱 유행
건강한 건축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페인트, 목재, 가구 등 다양한 범주에서 친환경 건축소재들을 선호
전략적 디자인	디자인은 물론 자연재해에 대비가 가능한 내구성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전략적인 디자인을 선호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태양광 패널, 물 재활용 시스템, 온수기와 같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in-place)와 유니버설 디자인	노인의 거주문제와 관련하여 넓은 복도, 난간 설치, 단층 주거 공간과 같은 에이징인플레이스와 유니버설 디자인이 증가
개방형 디자인	개방형 디자인 콘셉트의 주거 공간에서는 부엌이 중심 공간이 될 것
실외 공간 활용	데크, 파티오, 아웃도어 그릴 등 야외 공간으로 삶의 공간을 확장
홈 오피스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무실 공간을 수용한 형태인 홈 오피스에 대한 수요 증가
디자인 강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주거지 규모는 작아지더라도 더욱 강화된 디자인을 요구할 것
생활 편의시설	고밀도의 도시 주거 형태에서는 거주자들을 위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매우 중요

### 영국 왕립건축가협회(RIBA)의

#### '2016 영국 주거 디자인 트렌드 예측 보고서' 발표

영국 왕립건축가협회(RIBA)는 250명의 소속 건축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2016년 영국 주거디자인 트렌드 예측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확장과 맞춤형 디자인 ▲노인 동반 가족을 위한 기능적이고 편리한 디자인 ▲가족 공동체를 위한 열린 공간 ▲에너지 보존 등 지속가능성의 추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에 참여한 건축가의 55%가 맞춤형 주택 건설과 기존 주택의 확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토지 이용률의 증가와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이러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능성과 편리성을 갖춘 주거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점차 늘어가는 1인 가구와 노인 동반 가구를 위한 기능적이고 편리한 디자인이 미래 주거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주방·식당·거실 등 여러 기능을 포괄하는 다기능 주거 공간 또한 유행할 것이며, 정원 등 외부 공간으로 확장 가능한 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에너지 효율이 실제 디자인을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다. 이러한 예측을 내놓은 건축가 중 70%는 고단열 재의 수요가, 66%는 태양광·PV 패널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RIBA의 대표 제인 듀칸(Jane Duncan)은 “가족과 미래를 위한 주택 건설과 개선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보고서가 언급하는 내용은 2016년에 기대되는 주거 디자인 트렌드의 극히 일부일 수 있지만, 건축가들이 이를 통하여 통찰력과 주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영감을 얻길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자료: [www.architectmagazine.com/aia-architect/aiafeature/the-coming-decade-for-residential-design\\_o](http://www.architectmagazine.com/aia-architect/aiafeature/the-coming-decade-for-residential-design_o)

## 주택 부족난 해결의 새로운 움직임, 시드니의 그레니 플랫

[www.smh.com.au/victoria/granny-flats-a-cheap-housing-solution-20160120-gm9s0p.html](http://www.smh.com.au/victoria/granny-flats-a-cheap-housing-solution-20160120-gm9s0p.html)

[www.smh.com.au/nsw/building-boom-taking-place-in-backyards-20151219-glrxpx](http://www.smh.com.au/nsw/building-boom-taking-place-in-backyards-20151219-glrxpx)

시드니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 인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택의 남은 부지에 또 하나의 주거지를 건축하는 ‘그레니 플랫(granny flat)’이 시드니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다. 주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레니 플랫 건축은 5년 전에 비해 75%나 증가하였다.

시드니대학교 도시공학과 피터 피브스(Peter Phibbs) 교수는 이러한 경향을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시드니 지역 주민들이 본인 소유의 주택 부지가 지닌 부가가치를 활용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넓은 대지를 분할하여 두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레니 플랫이 시드니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5년 주택 분할을 위한 허가 수는 약 4,500건으로, 이는 2014년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이다. 그레니 플랫 건축 허가도 크게 늘어 2015년 3,650건으로 전해보다 20%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 증가의 원인을 피브스 교수는 새로운 주거 형태 선택지의 등장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중간 주거 형태라 할 수 있는 주택 분할이, 시드니 근교 넓은 주택 부지를 가진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주거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독립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5세 이전에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자녀가 20%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면서 하나의 땅 위에 별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레니 플랫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양시설보다 가족 곁을 선호하는 부모가 자녀의 그레니 플랫을 매입하여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순수하게 투자를 위해 그레니 플랫을 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비용과 이로 인한 높은 수익률, ‘에어비앤비(Air BnB)’와 같은 숙박 시스템의 유행 등이 그레니 플랫의 투자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주정부의 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시드니 지역에 50만여 채의 새로운 주택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롭 스톱스(Rob Stokes) 기획부장관은 “앞으로 계획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축·증축·개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 완화 등 계획 시스템 정비를 통해 그레니 플랫과 같은 주거난 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 볼리비아, 케이블카 시스템 'Mi Teleférico'의 추가 노선 계획 공개

[www.miteleferico.bo/teleferico/noticiast.php?idnoticia=Njc0](http://www.miteleferico.bo/teleferico/noticiast.php?idnoticia=Njc0)

[www.theguardian.com/cities/2016/feb/10/la-paz-cable-difference-city-subway-sky](http://www.theguardian.com/cities/2016/feb/10/la-paz-cable-difference-city-subway-sky)



라파스와 엘알토를 오가는 케이블카

볼리비아의 케이블카 시스템 'Mi Teleférico'의 노선 확충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획이 알려졌다. 지난 2월 17일 추가 노선 'línea Morada'의 기공식 자리에서 새로운 노선 'línea Plateada' 조성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Mi Teleférico는 행정수도 라파스(La Paz)와 위성도시 엘알토(El Alto)를 연결하기 위해 2014년 5월 개통하여 현재 3개 노선에서, 총 10km 구간에 걸쳐 운행되고 있다. 엘알토 간에는 늘 수많은 통근자와 학생들이 오가지만, Mi Teleférico 개통 전 두 도시를 오갈 방법은 고속도로를 지나는 것뿐이었다. 교통체증과 소음,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도입이 시급하였으나, 두 도시의 해발고도가 높고 도시 간 고도차도 커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케이블카 시스템 도입이었다.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케이블카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개통 후 2년이 지난 지금 Mi Teleférico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원활한 연결을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루 17시간 12초 간격으로 운영되는 이 '하늘 위의 지하철'은 하루 평균 6만 명의 이용자를 실어 나른다. 요금은 3볼리비아노(약 40센트)로 버스 요금보다 5센트 정도 비싸지만, 이동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고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어 가격 대비 효율성이 크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평이다.

특히 원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엘알토를 주변 지역과 연결하고 원주민 빈민층과 메스티소 중산층 간 교류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이동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 통합에 일조하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Mi Teleférico는 운행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켜 6개 노선과 23개 역 확장 계획이 발표되어 공사 중에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10번째 노선 'línea Plateada'는 201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앞서 완공되는 línea Celeste, línea Morada와 기존 2개 라인(línea Roja, línea Amarilla)을 연결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노선도와 línea Plateada 조성 계획

자료: Mi Teleférico 홈페이지([www.miteleferico.bo/teleferico](http://www.miteleferico.bo/teleferico))



## 일본 국토교통성, 건물 내 위치정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시범 운영

[http://www.mlit.go.jp/report/press/kokudoseisaku01\\_hh\\_000092.html](http://www.mlit.go.jp/report/press/kokudoseisaku01_hh_000092.html)

[http://www.mlit.go.jp/report/press/kokudoseisaku01\\_hh\\_000091.html](http://www.mlit.go.jp/report/press/kokudoseisaku01_hh_00009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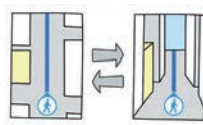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상과 실외는 물론 지하와 실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재팬스마트내비(ジャパンスマートナビ)’ 애플리케이션의 시험판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2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일본 최대 지하공간인 도쿄역 주변 지하도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국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방문 외국인이나 신체장애인 등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내외 통합 위치정보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지하공간에 매설되어 있는 무선통신 모듈 비콘(Beacon)과 와이파이(Wi-Fi) 신호를 활용하는 한편 여러 기관과 회사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위치정보 지도를 통합하고, 일정 수의 비콘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팬스마트내비가 ‘실내외의 단절 없는(seamless)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쿄역 실내 공간을 무대로 하는 이번 시험 운영을 통하여 실제 성능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힘을 썼다. 특히 시험 운영 기간 중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실제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개선 의견을 취합하여 차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재팬스마트내비 기술 특징

<p>■ 2.5D로 표현되는 지도</p> <p>경로가 복잡한 실내, 지하공간에서도 현재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2.5D 지도를 구현</p>  <p>2D 지도      2.5D 지도</p>	<p>■ 다양한 정보의 연동</p> <p>스마트폰으로 안내 사인을 촬영하였을 때 관련 정보가 연동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p>  <p>현재 위치정보 보관 안내 사인 촬영 버스 노선 등 정보 연동</p>
<p>■ 진동을 통해 안내하는 지도</p> <p>코너를 돌아야 할 때 등 주요 구간에서 진동으로 안내하여, 보행자가 시각뿐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p>	



자료: 국토교통성 보도자료, 「東京駅周辺屋内外シームレス測位サービス実証実験」に関する報道関係者向け説明会の開催について, 2016.1.28.



## 규제프리존 도입에 따른 입지규제 특례 내용

관계부처 합동  
2015. 12. 16.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2015. 12. 16.

정부는 지난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규제프리존' 도입과 특별법 제정 추진이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입지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입지규제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 완화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경우 최소면적 요건(1만㎡ 이상)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완화\*\*
- 현행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하도록 한 요건을 2개 이상으로 완화

###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적용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
-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특례\*\*\* 적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절차 중 중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현행	GB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장·군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자문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국토부장관)	1년
	개발 사업	개발계획 입안(입안권자)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산단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승인 (승인권자)	1년
개선	계획입안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산단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해제 및 지정 승인	1년

그 외에도 ▲친환경 산업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 4%p 범위 내 하향 조정 ▲복합 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50%에서 75%까지 시범 완화 ▲친환경 분산전원의 도시공원 내 설치 허용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여,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의 규제프리존 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대상 부지 조성공사 완료 후 지정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을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자지역 지정 의제하도록 개선하여 적용하게 된다.

\*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일률적인 토지이용 규제(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 등)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도구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 자연녹지지역 20% → 30%, 비도시지역 20% → 40%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12. 9.

정부가 신혼부부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대책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015년 12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비용 지원이나 제도 확충 등 현상적이고 단기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저출산·고령화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인 원인 진단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이다.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저출산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 강화
	제도 도입·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고령화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노인복지대책 위주	→	생산인구 확충, 실버산업 등 구조적 대응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별첨 설명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 계획, 2015.12.9.

이러한 맥락에서 기혼가정 대상 비용 지원 위주였던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만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만혼 문제의 큰 장애 요인인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신혼이나 젊은 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행복주택 5만 3,000호, 공공임대주택 8만 2,000호 등 모두 13만 5,000호 공급한다.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입주자격 완화, 거주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 또한 이루어진다.

##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내용

구분	기본계획 반영 내용	
임대 주택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확대</li> <li>·행복주택 14만호 중 5만 3,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li> <li>·제도 개선</li> <li>·예비부부 청약 허용,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li> <li>·행복주택에서 출산 시 더 넓은 행복주택 재청약 지원</li> </ul>
	공공 임대주택	<p><b>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수도권 교통요충지 1,000호 이상 단지 하남미사(1,500호, 2017) 시범사업 추진, 성남 고등(1,000호, 2018), 과천 지식(1,500호, 2019), 서울 오류(800호, 2016), 부산 정관(1,000호, 2018) 등 총 5,800호 추진</li> <li>·특화 내용: 50% 이상 투룸형으로 (예비)신혼부부 공급, 아동양육 친화시설* 대폭 확충</li> </ul> <p>*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 공간, 등하굣길 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차 없는 안전 보행로,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지 내 썬지농장 등</p>
	뉴스테이 (기업형 민간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계획</li> <li>·2017년까지 6만 호 공급 예상</li> </ul>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자금(버팀목) 대출</li> <li>·대출한도 상향(수도권 1억 원 → 1억 2,000만 원)</li> <li>·신혼부부, 2자녀 가구 금리 우대 신설(0.2%p)</li> <li>·예비부부 신청 편의 제도(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li> <li>·구입자금(디딤돌) 대출</li> <li>·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0.2%p 금리 우대</li> </ul>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거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2016년까지 저소득 고령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2,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건강관리와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또한 도입하여, 2017년까지 1,300호를 공급한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할 방침이다.

## 건축행정 투명화와 건실화를 위한 노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6. 1. 1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6. 1. 21.

### 지자체 대상 건축심의 모니터링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심의결과를 공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외 내용 심의 ▲모니터링 참관에 비협조 ▲광역 통합 심의기준의 미제·개정 등 부적합 ▲도시·교통 등 타 분야와 통합심의 운영 ▲심의제출도서 시스템화 ▲담당부서 심의범위의 적정수준 제한 등의 사례가 조사·파악되었다.

#### 모니터링 주요 결과

주요 점검 사항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례
도서제출 요구	13	7	별도의 구조관련 도서 등 요구
심의결과 10일 내 홈페이지 공개	8	12	심의결과 홈페이지 미게재
심의내용 적합성	8	12	안전과 상관없는 내용 심의
타분야(도시, 교통 등)와의 적합성	16	4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등

국토교통부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를 상시화하여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벌여 경상남도를 최우수기관, 서울시·세종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건축정책 충실 이행 ▲임의규제 정비 ▲민원처리 노력 ▲창의적 건축행정 시행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벌였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는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 민원전문위원회’\*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민원 수를 대폭 감소 시킨 점,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 21건을 신속하게 정비한 점,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하여 접근성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건축법령 운영 및 집행에 대한 민원처리 적법성 여부 판단(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설치)

## 서울시,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추진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6. 1. 12.

서울시는 문화유산을 도시 정체성 확립과 도시가치 제고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경제 논리에 가려 무분별하게 개발·유실되어 온 문화유산을 지키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파악·관리·활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2015년 7월부터 진행하여 2016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며, 역사·도시계획·인문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5인으로 ‘역사도시 서울 추진위원회’(위원장: 조광 서울시사편찬위원장)를 구성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2월과 3월 중에는 서울시 엠보팅(M-Voting)을 활용하는 한편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의회와 협의하여 ‘역사도시 서울 기본조례’ 제정 또한 추진할 방침이다.

## 인천시, 건축자산 보수·복원사업 및 관광자원화 추진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2016. 1. 6.

인천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근대 건축자산 보수·복원과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근대 역사·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노후·훼손 근대 건축물에 대한 보수·복원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축명소 관광인프라를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건축자산 기초연구’ 용역을 진행하게 되며, 보수·복원 사업에 시비와 군·구비 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군·구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보수·복원사업을 거친 이후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대에는 문화재 5개 동 등 모두 60개 동의 근대 건축물이 군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도시 가운데 근대 건축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 인천시 중구 일대의 근대 건축물



인천우체국



일본 제1은행

자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건축문화 가치 재창조 추진”, 2016.1.6.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움직임 본격화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2016. 1. 22.

군산시  
2016. 1. 27.

수원시 보육아동과  
2016. 1.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인증을 목표로 한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적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아동범죄·아동학대 사건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2016년 지자체들의 중요 시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과 관련된 열 가지 조건\*을 충족한 지자체에 대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성북구를 포함해 27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인증 획득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과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아동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법령과 시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 실태조사 실시 ▲돌봄센터, 아동도서관, 유아 숲체험장 등 인프라 확충 ▲아동 관련 NGO와 협력하여 아동 권리 교육·홍보 전개 등의 사업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2016년에 도시공간을 개선하고 아동 행복과 권리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 참여권 실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본격화하고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아동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가 확대되며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도 추진된다. 숲체험, 놀이교실, 직업체험교실 등 다양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동화의 숲',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등과 같은 아동 행복을 위한 시책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1월 발의한 데 이어 공직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해외 우수 사례,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중요성 등을 관련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시는 현재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 ①아동의 참여권 보장 ②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마련 ③아동권리 전략 개발 ④아동권리 전담기구 마련 ⑤아동영향 평가 마련 및 실시 ⑥아동 관련 예산 확보 ⑦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⑧아동권리 홍보 ⑨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기구 마련 ⑩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과 정책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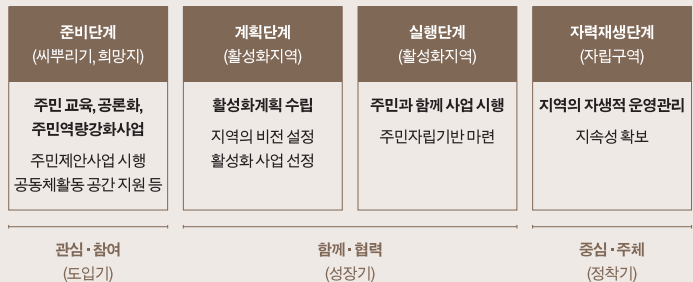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형 추진체계 도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주거재생과  
2016.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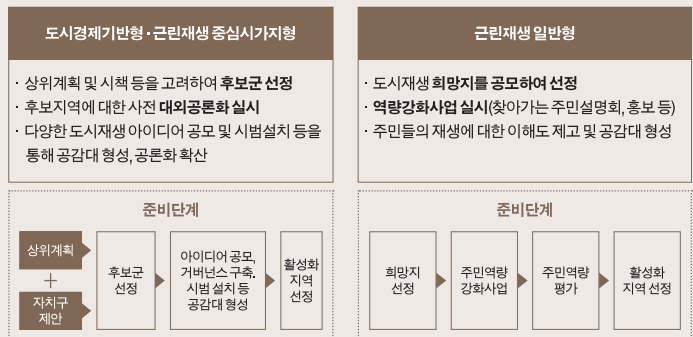
서울시는 도시재생 추진에 있어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2016년부터 이를 적용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적용되었던 ‘계획 → 실행 → 자력 재생’ 3단계에 ‘준비단계’를 추가한 ‘주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를 도입, 적용하게 된다. 이는 주민 공감대와 추진역량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달성할 수 없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가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도입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2단계 지정 전 희망지역에 대해 약 1년간 주민 교육, 주민협의체 조성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시행된다.

주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



또한 대상지 선정 시 도시재생 파급 범위에 따라 ▲도시경계기반형(광역 차원)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도심활성화 거점) ▲근린재생 일반형(노후 저층주거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된 준비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 세종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과 대체교통수단 적극 모색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  
2015. 11. 1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 교통과  
2016. 1.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  
2016. 1. 14.

###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확정

정부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유치 방식을 통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km(6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서울~안성 구간(71km)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2016년 말 착공에 들어가며, 안성~세종 구간(58km)은 2022년에 착공해 2025년까지 개통시킬 계획이다. 충북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지선 건설도 추진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세종 통행시간이 70분대\*로 줄어들어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약 60% 감소하고, 통행속도가 약 10km/h 증가하여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BRT 도로와 순환도로망 완성

세종시 4·5생활권을 연결하는 BRT 도로가 1월 개통되면서, 세종시의 순환도로망이 완성되었다.

새롭게 개통된 구간은 행복도시 4생활권과 5생활권을 통과하는 왕복 6차선 도로(7.4km)로, 이로써 환상형 순환도로망(22.9km)을 완성하여 신도심 모든 지역을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내부순환 BRT 도로의 개통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신도심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공자전거, 근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용

최근 세종시가 수행한 2015년 어울링 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어울링의 총 대여 건수는 11만 7,475건(1일 평균 322건), 총 이용회원은 3만 8,372명(시 전체 인구의 1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호수공원 주변과 세종청사·BRT정류장 주변 대여소 이용률이 높고,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링이 대중교통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생활권과 BRT 정류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여소를 확충하는 등 어울링이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힘쓸 방침이다.

\* 소요시간이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건설 후 74분으로 단축 예상

## 부산시, Active Healthy City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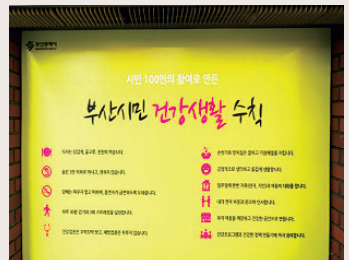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2016. 1. 18.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시민의 비만을 감소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Active Healthy City 조성 시범사업'을 도시철도 부산역에서 벌였다.

Active Healthy City 조성 사업은 바쁜 일상 속에 별도의 시간과 비용 투자 없이 일상생활 패턴이 신체활동이 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부산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자연경관 이미지를 계단에 래핑하여 '걷고 싶은 계단'을 조성하였으며 ▲대합실 기둥, 승강장, 발매기 하단에 점프, 멀리뛰기, 균형감각 테스트 공간 등을 조성해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산시민이 만든 열한 가지 건강생활수칙을 승강장 벽면에 부착하여 건강생활실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시철도 1~4호선 전동차 및 승강장 전광판을 통해 일상생활 신체활동 동영상을 내보내기도 하였다.

시는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놀이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려는 Active Healthy City 조성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역 Active Healthy City 조성 시범사업

자료: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일상이 운동이 되다! 주변이 운동장이다", 2016.1.18.

# ‘이렇게 되면 좋겠다’를 생각하는 연구소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와 건축연구소

일본의 도시계획과 건축은 한국의 그것과 많이 닮았다. 공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나 도시와 농촌, 지역의 지리적인 측면이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 또한 풍토가 비슷하여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정책 분야에서는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 비슷하다.

일본에서 건축과 도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Land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NILIM, 이하 NILIM)와 건축연구소가 있다. 이 글을 통해 일본 NILIM과 건축연구소의 역할 및 비전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축·도시 분야 연구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임화진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MLIT, JAPAN



아사히(旭), 타치하라(立原) 청사 전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ILIM 청사

NILIM은  
‘아름답고 안전하며  
활력 있는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 및 사회자본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술정책을 기획 및  
입안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 건축·도시 분야 연구소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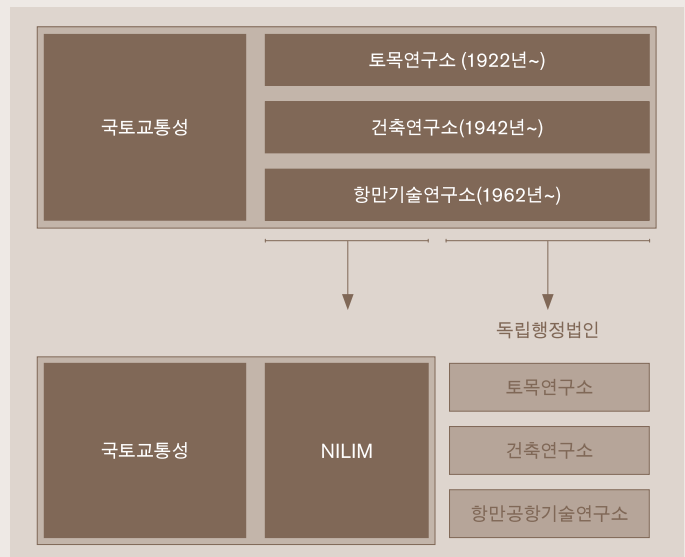
일본 국토교통성과 관련된 국립 연구소는 크게 NILIM과 ‘토목연구소’, ‘건축연구소’, ‘항만기술연구소’가 있다. 이들 중 토목연구소·건축연구소·항만기술연구소는 2001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부터 독립행정법인 관련 법 개정으로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토목연구소·건축연구소·항만공항기술연구소에서는 각각 관련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실용화를 목표로 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NILIM에서는 국토교통성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두고 업무와 관련된 정책 지원, 기술기준 책정 및 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NILIM의 역할은 국토교통성 조직법 제193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정비 관련 기술 개발, 국토교통성 소관 사무와 관련된 정책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시험·연구 및 개발, 기술에 관한 지도 및 성과 보급, 기술에 관한 정보 수집·정리 및 제공을 수행하는 것이 NILIM이다.

한편 토목연구소·건축연구소·항만공항기술연구소는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2조에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공공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중앙정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 중 민간에 맡길 경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조사·연구·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의 건축 및 도시와 관련된 연구소 체계



## 건축연구소의 조직도



세부 연구 분야 등으로 보자면 국토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통합 형이 NILIM과 유사하고, 우리나라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축연구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 기술과 가까운 건축연구소

건축연구소는 1946년 전쟁부흥원의 기술연구소로 탄생하여 1948년에는 건설성의 설치에 따라 건축연구소로 바뀌었으며, 1979년에는 쓰쿠바(筑波) 연구학원도시로 이전하였다. 건축연구소는 창립 이래 건축·주택 및 도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행정시책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이후 건축연구소의 일부는 NILIM으로 분리되었다.

건축연구소는 공정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소 내 고도의 실험 시설을 활용하여 주택·건축·도시계획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진공학에 관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중앙 정부가 실시하는 관련행정시설의 입안 및 기술기준의 수립 등에 반영된다. 연구성과가 민간의 기술개발과 설계 및 시공 현장에서 활용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공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 등 양질의 주택·건축·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헌하는 것이 건축연구소의 목표다. 또한 지진공학과 관련 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자 등을 육성하여 지진방재대책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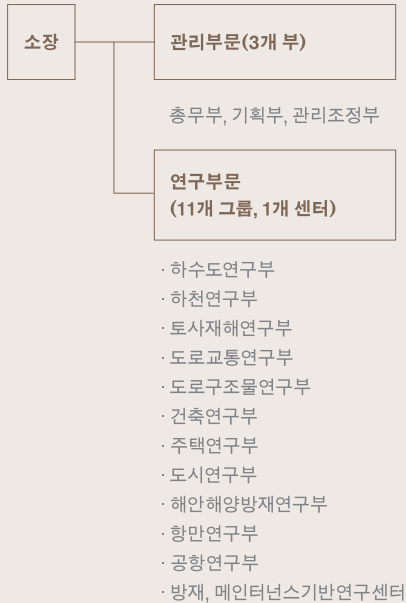
건축연구소의 예산 규모는 수입이 20억 엔(2015년 기준)으로 교부금 17억 엔, 수탁연구수입 약 1억 6,000만 엔이다. 직원 수는 총 81명으로 이들 중 연구자는 53명이다.

### 건축·도시·국토 연구를 아우르는 NILIM

NILIM은 주택 및 사회자본 분야에서 유일한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으로 2001년 4월에 설립되었다. NILIM은 국토교통성의 행정 부문과 일체화된 기술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소이다. NILIM은 '아름답고 안전하며 활력 있는 국토'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택 및 사회자본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술정책을 기획 및 입안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하천, 도로, 하수도, 건축, 주택, 도시, 항만, 공항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자본이 효율적으로 정비되는 것을 돕고 있다.

NILIM의 예산규모는 총 101억 엔(2015년 기준)이며 대부분 국토교통성의 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직원 수는 364명으로 이 중 연구직은 258명이다.

## NILIM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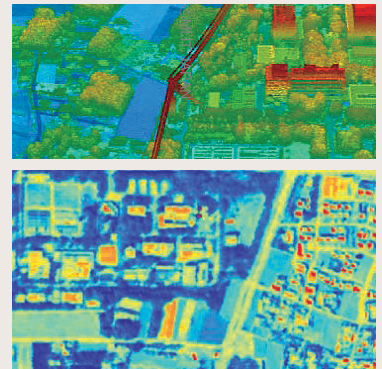
NILIM에서 건축, 주택, 도시에 관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으로는 크게 건축연구부, 주택연구부, 도시연구부 3개의 부가 있다. 이들 연구부는 각각 연구실을 두고 있는데, 그중 건축·도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는 주택계획연구실과 도시계획연구실이 있다.

주택연구부 주택계획연구실에서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다른 연구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21 세기에 걸맞은 주택계획(주생활정책)의 책정 및 입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은 생활의 기반’이라는 모토 아래 뾰족한 재정 상황에서도 하우스 푸어에 대한 주택 안전망의 구축과 거주안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 고령자가구, 장애인 가구, 외국인, 육아 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성의 주택계획 및 주택정책목표 전반에 걸친 설정과 연구를 수행하고 주택입지의 적정화, 도시거주추진 등에 대한 연구, 기존 맨션의 재건축에 관한 재생수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연구부 도시계획연구실은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콤팩트 시티, 저탄소 도시 계획 등 각종 도시정책의 기획 및 책정, 제도 정비 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니즈에 대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보급하여 국토교통성의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시가지정비사업, 도시시설정비사업 등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비하고 정책평가수법을 확립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 및 경제 전반의 다이내믹한 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 비전 탐구와 제시, 지방 공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이용 매뉴얼  
자료: NILIM 홈페이지([www.nilim.go.jp](http://www.nilim.go.jp))



저탄소 도시 계획을 위한  
시가지 녹지화 영향 측정·분석 연구





NILIM의 어린이 대상 홍보 팸플릿

NILIM과  
건축연구소가  
강조하는  
‘국가연구기관  
연구결과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신조는  
우리 기관에서도  
명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다

### 유효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관리 시스템

NILIM의 연구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과제의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략적 지침’을 바탕으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관 내 자발적으로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구축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별 연구과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세 단계에 걸쳐 평가를 받는다. 연구의 필요성·유효성·효율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신규 연구과제(보조)는 사전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신규 연구로서 연구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제와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이 5년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3년 정도를 두고 연구 추진 상황과 성과, 계획 수정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와 활용 상황에 대한 사후평가 또한 실시하여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연구성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새로운 연구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연구소, 국민에게 한층 다가가다

최근 NILIM과 건축연구소는 연구결과를 공청회나 이벤트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NILIM의 어린이 대상 홈페이지는 대외적으로도 인기가 많다. ‘되었으면 좋겠다 연구소(なるといいな研究所)’라는 별명을 짓고 NILIM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거나 정기적으로 연구소 공개 행사를 여는 등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의 노력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NILIM과 건축연구소가 강조하는 ‘국가연구기관 연구결과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신조는, 우리 기관에서도 명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 INTERVIEW



NILIM 도시연구부장  
사토 겐이치(佐藤研一)

NILIM의 연구 분야와 시스템을  
글로벌로 옮기는 데 사토 겐이치  
부장과의 서면 인터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앞선 글에 다 실지  
못하였지만, NILIM 도시연구부  
활동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한다.

### Q NILIM 도시연구부의 연구 목표와 의의를 설명해 주신다면?

A 도시연구부는 도시에 관한 국토교통성의 정책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획 및 입안·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컴팩트한 도시만들기, 저탄소도시만들기,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등 중앙정부의 정책과 기획·입안·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도시계획법·건축기준법·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기타 법령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의 원안 작성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시정책 및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건축·도시계획 분야의 연구 테마는 무엇입니까?

A 국제연합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의 인국 중 도시인구가 70%에 이르게 됩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여 경제와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감소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도 도시는 성장의 원동력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온실효과가스의 대부분을 발생시키는 공간이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어 국가전략으로 도시공간의 정책을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분권에 따라 도시 및 마을만들기의 권한 중 일부가 지방에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도시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전략 및 비전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연구부는 이러한 배경에 발맞춰 컴팩트한 도시 만들기, 저탄소도시 만들기,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라는 세 가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연구성과 평가 체계에 대한 설명이 앞서 있었습니다만, 도시연구부의 연구성과가 정책에 더욱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보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A NILIM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령 등에 관한 기술지침 및 정책평가수법 등의 원안 작성 등에 반영하는 경우와 지방 공공단체의 제도운용에 관한 것으로 정책대응형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구상 및 착수단계에서부터 성과가 현장에 활용되는 보급단계까지 국토교통성 및 지방 공공단체 등과 회의·현장조사 등을 철저히 진행하여 의견교환과 정보수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밀접한 연계를 통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NILIM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상담과 현장의 기술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구성과의 보급활동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 21

Spring 2016

# 장소 탐방

Place Review

역사를 끌어안은  
빛의 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92

무한한 가능성을 짓다  
-무중력지대 대방동  
106

**역사를 끌어안은 빛의 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민주적이면서 친 환경적인 수평의 대지가 새로운 도시 풍경을 자아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무거운 추모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기념비적 장소이면서도 가깝게 다가가 있고, 조금 더 극적인 방식으로 지난 과거를 기억하게 한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사색하고 자연을 느끼며 과거를 배경 삼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짓다 -무중력지대 대방동** | 컨테이너 건축이 보여줄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도시 안의 유휴지와 결합하여 작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40피트 길이의 운송용 컨테이너 12개와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로 구성된 청년 종합활동을 위한 건축공간으로서 경제성과 가변성을 토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역사를  
끌어안은

빛의  
숲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권경은

전 우규승 건축사무소 소장  
현 오피스 경 소장

#### 개요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7
용도	문화시설,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어린이박물관
대지면적	96,036㎡
건축면적	21,314㎡
연면적	143,840㎡
규모	지상 4층, 지하 4층
구조	PC 콘크리트, RC, 철골조복합구조
설계	우규승 건축사무소
시공	대림산업
건축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경





아시아문화광장의  
동북쪽 끝은  
기존 도심 도로에 연결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항쟁과 관련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시설을  
지하에 위치시키고 상부는 공원과 광장으로 형성하였다.  
‘빛의 숲’은 이러한 도시 구조의 단면적 재형성을 통해  
이 대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의도되었다.

지표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공원이 되고,  
도청과 경찰청 일대는 전당 자체보다도 자연스럽게 높게 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영역 자체가 ‘기념비’가 된다.







- 상 어린이문화원은 유일하게  
지상부로 노출되어 있어 강한  
개방감을 준다.
- 하 대극장 앞의 보행전용 브리지는  
기존 도심 도로(서석로)를  
전환한 것으로,  
지상에서 광장을 가로지르는  
경험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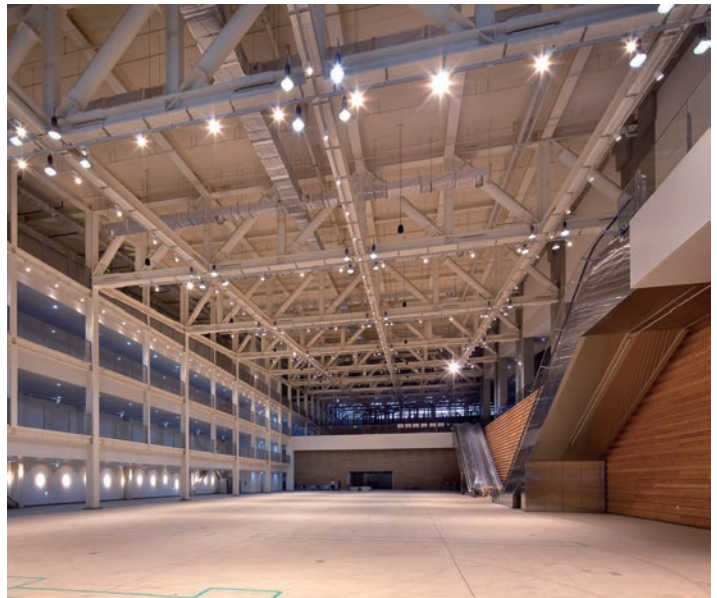
© 90  
90  
90



© 和 順 堂



© 和 順 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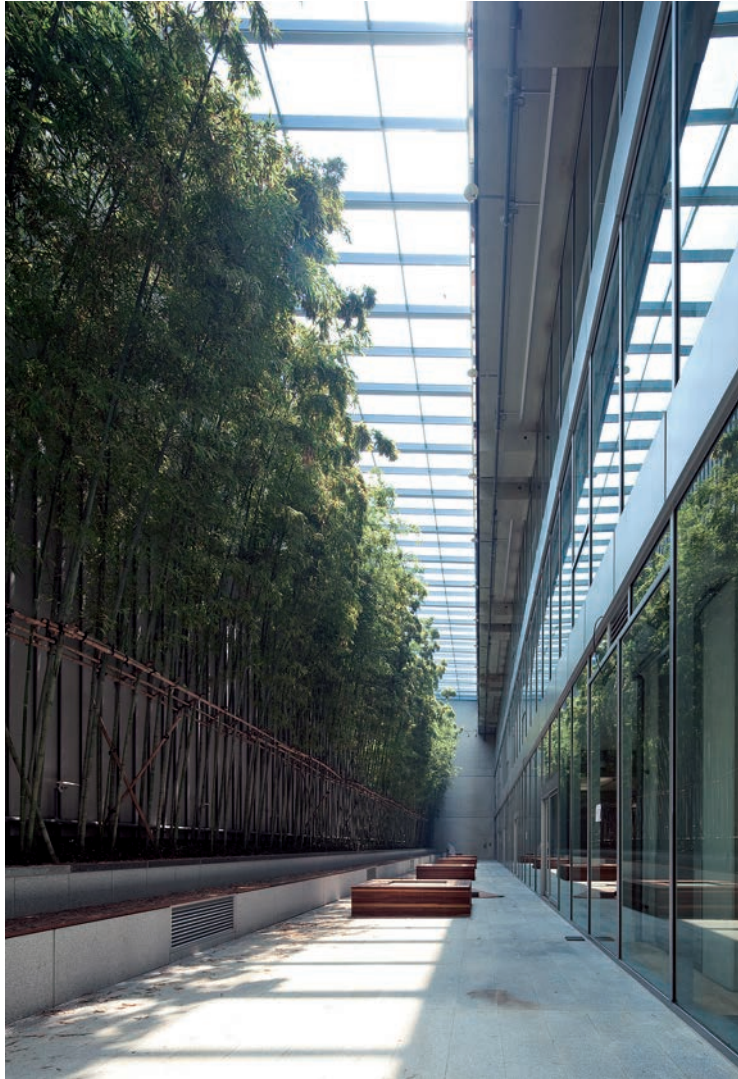


© 和 順 堂

- 상 4m의 주복도는 내부에서  
아시아문화광장을  
면해 각 시설을 연결한다.
- 하 복합 전시관 내부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 등을 통해  
유연한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의 선형 대나무 정원은  
일종의 아트리움으로  
내부경관을 제공하고  
주광을 끌어들이 지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공간이다.



© 2018  
한국의 건축

한국 전통 건축의  
후정 역할을 하는 대나무숲

## 익숙하지 않은 풍경

2005년, 옛 전남도청과 그 일대에 거대 문화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 이미지가 기존 문화시설들처럼 장대한 조형성을 갖는 모습에 가까울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 11월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방문자를 맞이하는 풍경은 4만여 평의 시설이라는 통념이 제시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금남로의 끝에서 방문자들은 건물이 아닌 광장과 공원을 먼저 만나게 된다. 거대한 시설의 위용과 긴장감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이곳은 평화롭고 조용하며 산책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다가온다. 동서남측의 도로에 면한 공원으로 형성된 영역을 거닐면서 방문자는 대지 중심부에 위치한 옛 전남경찰청을 볼 수 있다. 그 건물을 향해 걸어가면 공원의 경계부에 도달하고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형성된, 마치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진 발아래 계곡의 모습을 보게 된다. 새로운 시설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선큰광장의 주변이 방문자가 산책 중인 공원의 하부에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풍경으로 경험되는 과거

테크놀로지에 힘입은 새로운 유형의 문화시설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로 시험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4만여 평의 규모에 전시·공연·교육 등 문화의 연구·생산·소비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대규모 문화시설이지만 선택된 대지인 '5·18민주항쟁의 현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 2005년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우규승 건축사무소의 '빛의 숲'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시 구조의 재편성을 통해 제시하였다.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시설을 그 주변부에 계획하되,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에 의해 역사적인 건물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청과 경찰청 주변으로 대지를 파고 지표 아래 모든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빛의 숲에서 지표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공원이 되고, 도청과 경찰청 일대는 전당 자체보다도 자연스럽게 높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역 자체가 기념비가 된다.

© 2015  
NAC



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경  
하 기존 도심 도로에 연결되는 아시아문화광장



광장의 입면전개도

5·18광장에는 상부 공원에서 볼 수 있던 선큰광장으로 연결되는 넓은 경사로가 있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의 사이에 형성된 이 경사로는 게이트의 역할을 하면서 선큰광장과 연결되고, 지하2층의 높이에 해당하는 레벨에서 광장은 좌측으로 이어지며 완만한 경사로 다시 대지 깊숙한 곳으로 사람들을 유도한다.

이 지점에서 빛의 숲이 의도한 전당만의 위엄과 시선을 경험하게 된다. 그곳에서는 5·18민주항쟁의 시설과 광주 도심 배경으로 광장과 방문자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기준으로 보자면 3개 층 정도의 높이에 지나지 않는 새 시설의 입면에 둘러싸인 광장은 다시 서쪽 끝에서 북쪽으로 꺾이며 연속된다. 그리고 북측의 끝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신서석로와 연결되는 순환 동선이 되며,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 된다.

아시아문화광장이라 명명된 이 광장은 평균 폭 60m, 총연장 약 600m로 'U'자형을 형성하며 기존 도심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시설 내부와 내밀한 위계를 동시에 갖는 전당 공간 조직의 중심이 된다. 이 광장을 따라 걷다 보면 단계적으로 각 시설로 진입하게 되는 주된 입면부, 주출입구들과 연결되어 내부 활동이 광장에 투영된다.



###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풍경

광장으로 면한 입면부에 위치한 주복도는 각 시설을 내부에서 연결하는 동선이자 광장의 활동, 그리고 그 너머 5·18민주항쟁의 기억, 내부 공간의 활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복도는 교육·연구 시설과 전시 시설로 이어지며 대지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공연장까지 연결된다.

새로운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성격 때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내부 시설은 건축물의 긴 수명과 함께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구성을 필요로 하였다. 내부 시설의 상당 부분은 장스팬의 PC 구조가 그 인상을 지배하는데, 이 구조로 인해 내부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른 실의 재구획이 용이하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슬래브 복사 냉난방 등 친환경 시스템의 활용과 함께 복합적인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 생산의 장소’라는 시설의 성격과도 부합하는 내부 풍경을 만들어 낸다.



- 상 유일하게 지상부로 노출되어 개방감을 주는 어린이문화원
- 중 한국 전통 건축의 후정 역할을 하는 대나무숲
- 하 복합 전시관의 스캐폴딩 구조

주동선 체계와 다소 분리된 어린이문화원은 전체 영역을 관통하는 평지라는 개념과 달리 지상부로 완만히 돌출되어 지상에서도 쉽게 인지가 된다. 현상설계에서는 다른 부분과 같이 완전히 지하에 위치해 있던 시설이지만, 현상설계 직후 랜드마크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반영하여 일부 지상으로 돌출시킨 부분 중 하나이다. 투명성의 개념이 잘 구현된 시스템인 케이블 넷으로 처리된 이 매스는 내부의 활동이 외부로 투영되며 밝은 시설로 완성되었고, 지면의 하부와 상부의 변화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내부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곳은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가에 의해 '집 속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내부 전시 방식이 제안되어 어린이의 스케일로 분절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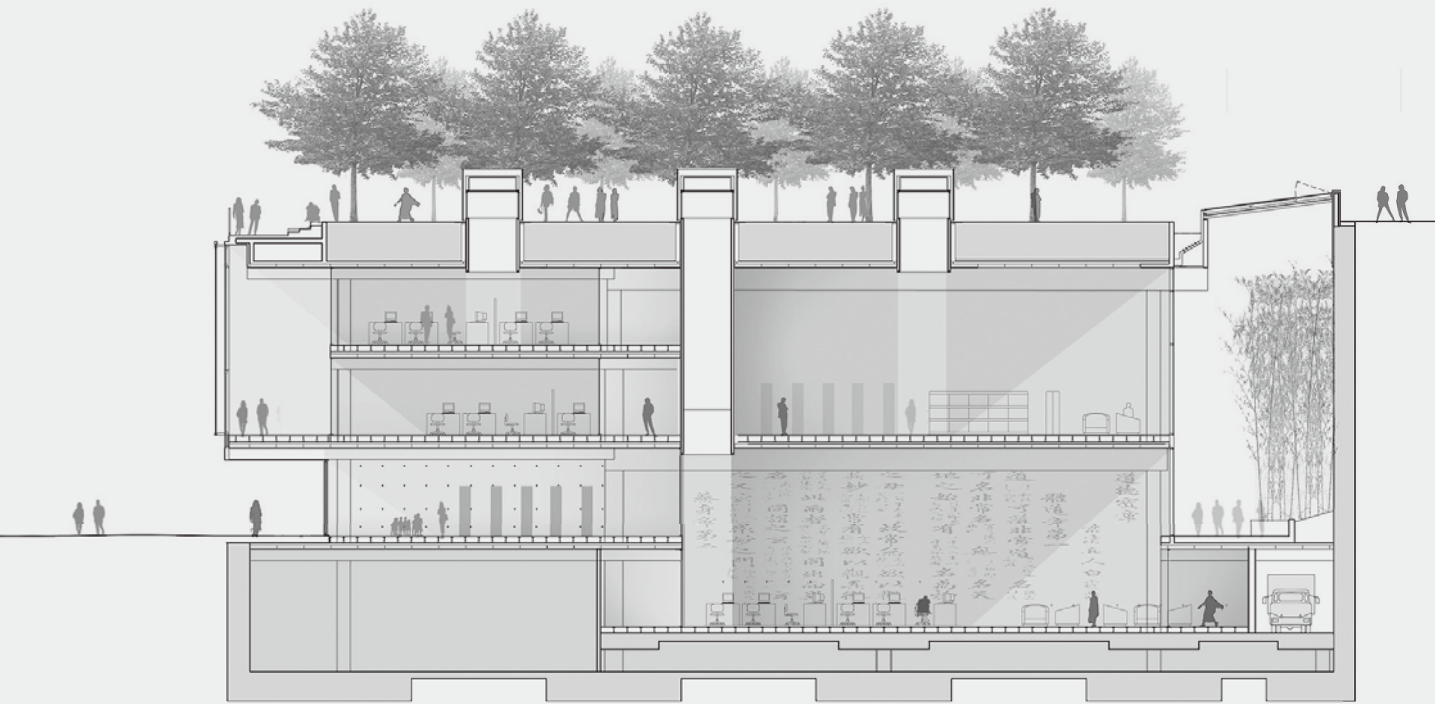
아시아문화광장과 복합 전시관, 예술극장의 스캐폴딩 구조물 역시 열린 가능성을 수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사용에 따른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제안이다. 이러한 구조의 공간들은 공사 완료 후 다른 건축가들의 실내 작업을 유연하게 수용하며 의도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문화광장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대극장은 이러한 공간의 유연한 사용이 내외의 연결이라는 직접적인 활용으로 발전된 공간이다.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면 극장 앞 광장은 하나의 공연 공간으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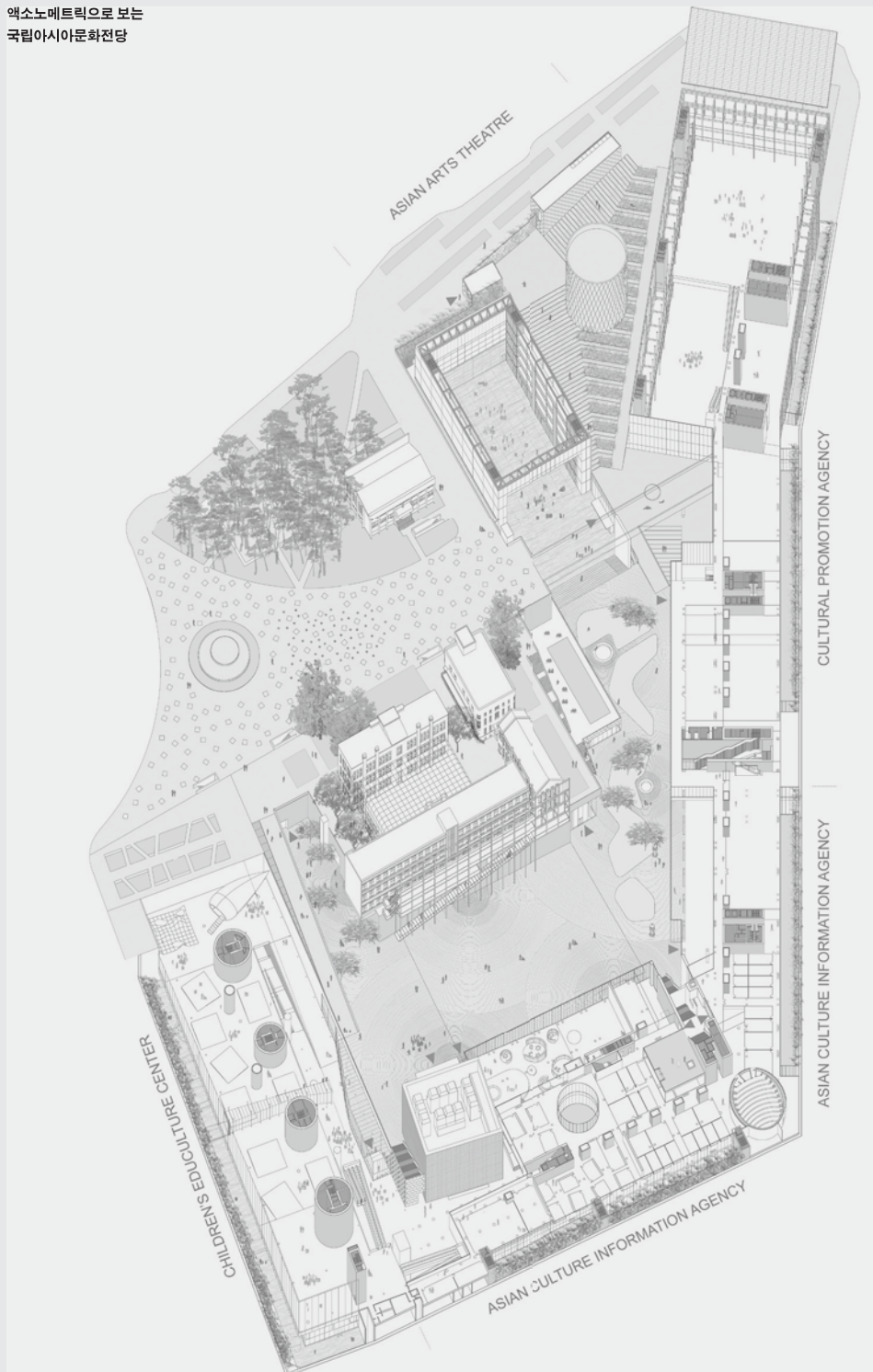
## 빛의 숲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대지 내 곳곳에서 5·18의 흔적을 조망하여 기념비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를 일상, 문화적 경험과 연계하려 하였다. 그 의도가 잘 드러난 공간이 전당 상부에 조성된 공원이자, 이 시민공원은 고밀도의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거대한 스케일의 건축물을 부각시켜 존재를 과시하기보다 민주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수평의 대지가 새로운 도시 풍경을 만들어 내도록 하였다. 전당의 지붕이기도 한 이 공간에는 어린이 놀이 공간, 느티나무 수림대, 다목적 이벤트 광장, 계단식 광장 등 하부의 각 시설에 대응하면서도 녹지가 조성된 조경 공간이 계획되었다. 시민공원의 느티나무를 주수종으로 하여 이 지역의 상징적 수종인 대나무와 은행나무 등 다양한 식재들이 시민들과 사용자에게 풍부한 외부 공간을 제공한다.



PC 구조와 주광의 유입,  
개방된 입면 등은 '빛의 숲'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빛의 숲은 이러한 일상적 자연에다 빛을 더하여 이 장소에 대한 상징과 기념비성을 갖도록 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빛은 빛고을 광주의 이미지, 민주의 이념과 상통하는 투명성의 개념이다. 아울러 천창을 중심으로 한 야간의 빛은 숲과 함께 전당 경관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내·외부의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 기능을 하게 된다. 자연광은 중심·주변부의 공간적 조직을 강화하고 공원에서 광장으로의 연결을 암시한다.

빛은 가장자리로부터 내부 공간까지 대지의 경계를 형성하는 대나무 정원과 계단식 광장을 면한 입면을 통해 스며든다. 상부 공원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2m×2m의 천창은 주광을 건물 내부 깊숙이 끌어들이고, 야간에는 공원의 랜턴으로 작용하여 빛의 숲이 연출된다. 대지 경계를 따라 형성되는 폭 8m, 높이 12m의 대나무 정원은 한국 전통 건축의 후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인접한 시설에 따라 건물 내부 깊은 곳에서 외부 공간을 형성하거나 실내 정원이 되어 사용자들의 휴식 장소가 되기도 한다.

### 익숙한 일상의 풍경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가장 큰 장점은 10년 전 주변의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 5·18민주항쟁의 시설들이 인지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중심성이 강화되었다는 작은 차이가 있고, 더 큰 차이라면 근현대를 거치며 풍부하지만 어지러운 도시 조직 안에 있던 5·18 관련 건물들이 이제 평화롭고 사색을 할 수 있는 너른 공원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추모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가깝게 시민에게 다가와 있고 조금 더 극적인 방식으로 지난 과거를 기억하게 한다. 아 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광장과 여름 뜨거운 햇볕을 가려 줄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에서 문화전당을 방문하는 이들은 5·18의 사건을 배경 삼아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



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 전  
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 직후

# 무한한 가능성을 짓다

# 무중력시대 대방동

이강수  
강주형

(주)생각나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0-5
대지면적	1,646m <sup>2</sup>
건축면적	231.6m <sup>2</sup>
연면적	398.4m <sup>2</sup>
건폐율	14.1%
용적률	24.2%
규모	지상 2층
구조	경량철골구조
시공	(주)동우공영
설계기간	2014.9.~2014.12.
공사기간	2015.1.~2015.5.
건축가	이강수, 강주형
설계팀	이택호, 오진영, 이한송, 홍창일



북측에서 바라본 건물 외부 야경





동쪽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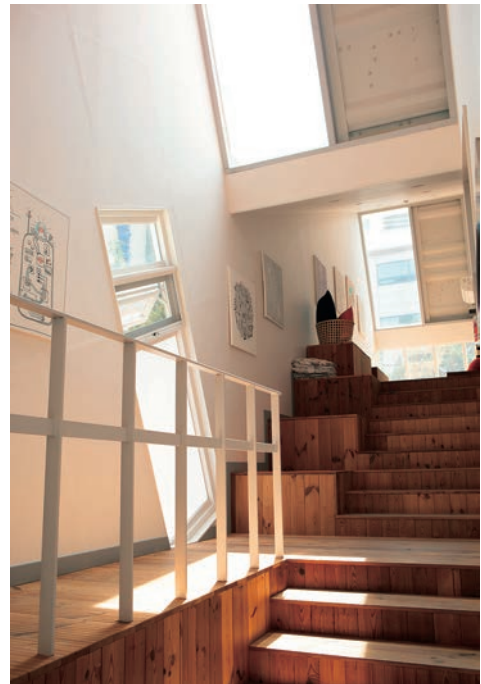




©주생각나무퍼트너스건축사무소



©주생각나무퍼트너스건축사무소



©주생각나무퍼트너스건축사무소

상 1층 라운지  
하·좌 1층 라운지 부엌  
하·우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단 라운지

컨테이너는  
구하기 쉬운 재료로  
건축공간 규모의  
스케일에서  
친환경적  
순환구조를 가지고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유용한 수단이다.



©유정진나무페인트건축사무소

세미나실에서 바라본  
1층 라운지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중력을 표방한다.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콘텐츠를 담은  
 ‘무한하게 열린 플랫폼’이다.



©엘리무퍼트너스건축사사무소

1층 라운지에서 열린 공연 모습



## 건축 속 컨테이너의 등장

컨테이너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어디일까? 컨테이너 하면 거대한 무역 선박과 항구의 선착장에 층층이 적재된 풍경이나, 산업 도로를 끊임없이 오가는 트레일러 위에 실려 있는 모습이 떠오를 듯하다.

1960년대 이후 운송용 수단으로 최적화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산업·무역 분야에서는 당연하고도 친숙한 존재이지만, 일반적인 도시공간과는 떨어져 있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 컨테이너가 가득한 영화와 드라마 속 은밀한 범죄와 거래의 현장, 어두운 부두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그럼에도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적·문화적 요구에 따라 트렌드가 바뀌었으며, 국내에서도 컨테이너가 건축 공간과 건축 재료의 모습으로 도시민들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오는 기회가 늘어났다.

## 경제성과 가변성의 재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N포세대’라고 불리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의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은 13개의 컨테이너 볼륨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교류, 휴식과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여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중력을 표방한다. 이벤트와 세미나, 문화교류, 프로젝트 지원 등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콘텐츠를 담은 ‘무한하게 열린 플랫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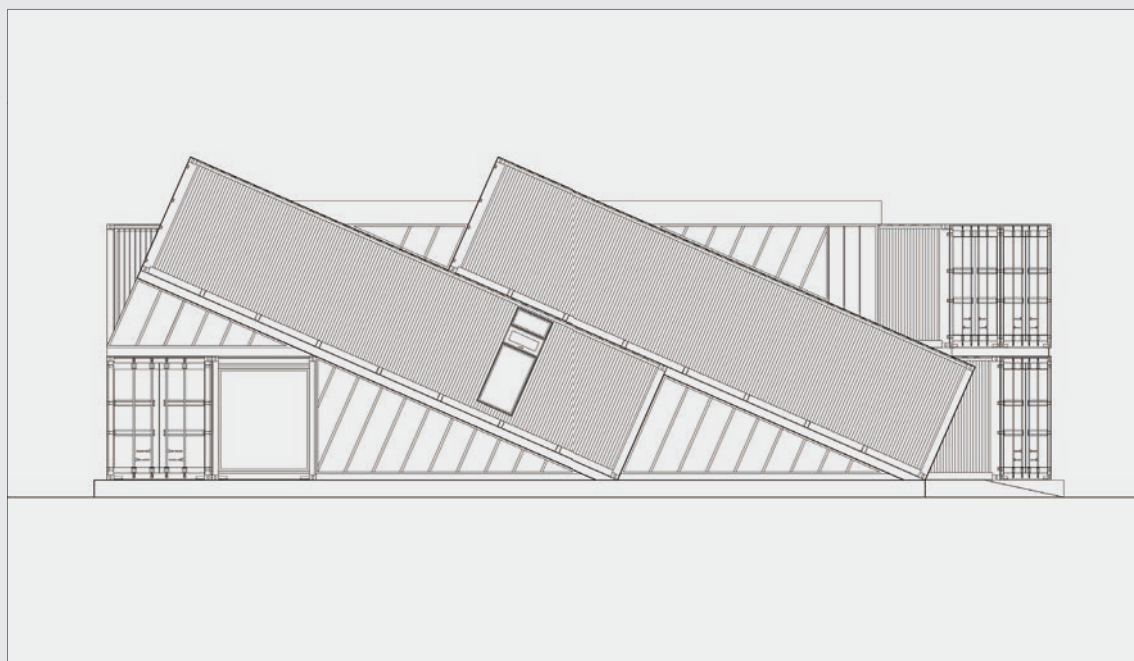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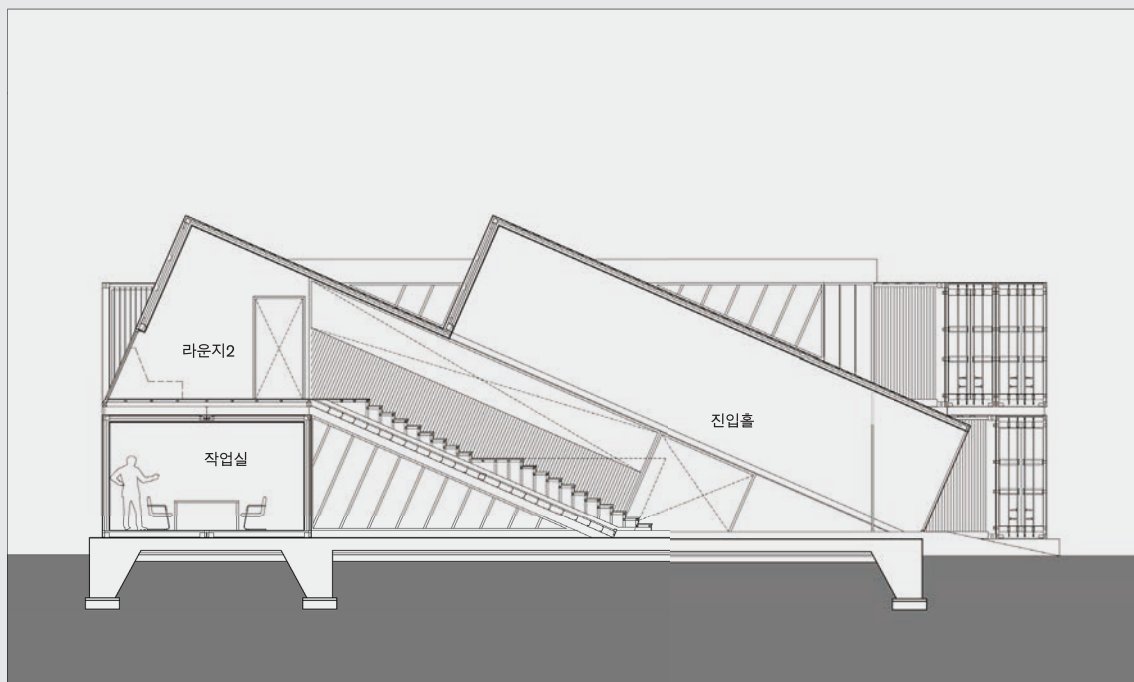
서울시는 젊은 층의 유동이 많은 노량진과 인접하여 위치한 대방역 근처 유휴지를 대지로 제안하였다. 이곳은 예전에 미군부대 시설로 사용되다가 미군부대의 이전 계획으로 개발 이전까지 주민들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개발 예정인 대지의 특성을 감안하고 책정된 예산과 일정을 고려하여 컨테이너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청년무중력지대·도시건축연구소



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전면

하 북측에서 바라본 건물 외부



상 단면도  
하 동측입면도

컨테이너는 구하기 쉬운 재료일 뿐 아니라 건축공간 규모의 스케일에서 친환경적 순환구조를 가지고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유용한 수단이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청년 종합 활동공간이라는 커뮤니티 시설을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담아내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표준화된 규격과 기밀한 마감, 그리고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내 공간으로의 변용이 쉽고 규모와 용도에 따라 여러 모듈을 조합해 필요한 면적으로 확대하기 수월한 편이다. 이에 더해 물결 모양(Corrugated)의 표면 패턴과 철문의 하드웨어는 구조와 개폐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산업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여 현대적인 트렌드를 표현할 수 있다.

도시 환경에서 다소 생경한 컨테이너 모듈은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무중력지대의 프로그램과 공간의 상징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도록 텃밭 인근 주차장 일부의 삼각형 모퉁이에 자리 잡도록 건물을 배치하였다. 주거지와 대방역 입구로 통하는 기존 주민들의 보행 동선이 방해 받지 않도록 고려한 것이기도 하였다.

### 컨테이너로 공간을 쌓다

기본적인 공간 구성은 메인 홀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 공간과 교류 및 휴식을 위한 공동 부엌과 휴게 라운지, 그리고 업무와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이뤄졌다. 여러 프로그램을 담기 위해 2개 층 높이의 메인 홀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모듈을 둘러쌓아 아트리움을 형성하였다. 컨테이너가 갖는 단위 모듈의 제한과 규격에서 벗어나 큰 공간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주변 공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과 배치를 구획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직 동선인 계단부를 활용하여 내부와 외부에서 역동적인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이경훈 국민대학교 교수는 컨테이너의 기능과 모듈이 어떻게 컨테이너 건축의 영역으로 전환되는가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경남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상 북측에서 바라본 건물 외부 야경  
하 건설 과정 중의 모습



©(주)경리나우퍼티스건축사사무소



상 세미나실에서 바라본 1층 라운지  
하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단 라운지

“컨테이너는 그 자체의 완결성, 즉 건축으로서 자신을 지탱하고 방수의 기능을 가진 최소한의 공간, 건축이라는 점에서 완성된 유닛을 들어다 놓을 수 있는 이동 가능성과 일시성이 최대의 특성이자 한계이다.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 빌딩이라는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파괴하여야 가능하게 된다. 옆 공간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완결성을 깨뜨려야 하고 구체적 대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동 가능성을 포기하게 된다. 이 결과로 순수한 추상적 입방체가 건축의 재료가 되는, 보기 드문 경험을 하게 된다.”

「현대판 초가와 컨테이너」, 『SPACE』 577호, 2015.12., p55.

건축적인 재료가 되고 건축적인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 모듈이 갖는 기능성과 순수성이 전체적인 공간의 조화를 위해 변경되는 것이다. 무중력지대는 컨테이너 모듈의 조합과 합성 및 연계를 통하여 표면을 절개하고 이어 붙여 메인 홀 이외에 세미나실, 화장실과 나눔부엌, 사무공간과 테라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은 ‘외부-내부공간(컨테이너)-내부공간-내부공간(컨테이너)-외부공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컨테이너 볼륨을 통해 내외부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공간적 커로 작동한다.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내부공간이 벽이라는 2차원의 요소로 구획이 정해지는 반면 여기서는 3차원의 공간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3차원의 공간들은 경사를 주어 계단 공간으로 활용되는가 하면 화장실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컨테이너 유닛은 외부로 향해서는 외벽으로써, 내부로 향해서는 프로그램을 구분해주는 내벽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무엇인가를 담는 입방체로서 컨테이너의 숙명적인 역할일 것이다. 이런 점을 기본으로 컨테이너 모듈의 조합과 개폐를 통해 각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1층에는 나눔부엌·화장실·세미나실과 스튜디오가 있고, 2층에는 6개의 사무공간이 파티션을 통해 일정하게 나뉘어 있다.

컨테이너는 적재하거나 연계하는 건축적인 계획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체 프레임을 통해 구조 역할을 맡게 되므로 구조체로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절개한 부분을 중심으로 구조적 보강이 더해진 것이다.



## 확장과 개방, 무한히 열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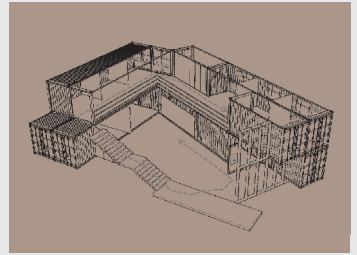
주민들의 평상시 이용 동선을 고려하였을 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지하철 대방역 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가장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인 사선의 컨테이너 마구리 부분을 열어주어 진입이 쉽게 하였다. 열린 개구부로 들어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마주하면서 메인 홀에 들어서는데, 메인 홀을 중심으로 모든 실들이 배치되어 처음 방문하더라도 커뮤니티 활동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지상층에 아트리움을 비롯하여 세미나실과 열린 주방이 있다. 휴식과 이벤트 그리고 소통과 교육을 위한 공간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특히 세미나실은 폴딩 유리문을 열면 아트리움으로 확장되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부엌과 화장실 같은 설비가 필요한 실들을 모아 하나의 볼륨으로 묶어 효율성을 높였고, 2층의 사무공간과 세미나실은 두 개의 모듈을 합쳐 사용 면적을 넓혔다.

사선으로 기울어진 두 개의 컨테이너는 상승·자유·도약의 이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계단, 휴식과 전시를 위한 공간이 되어 청년들에게 쉬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한다. 2층에서 사무공간으로 들어서기 전 컨테이너가 없어서 생기는 틈에 해당하는 공간은 자연채광을 받는 미니라운지로 활용된다. 메인 홀을 중심으로 컨테이너로 둘러싸이지 않은 북측 부분은 2개 층 높이의 투명창을 통해 개방감과 자연채광을 극대화하였다. 사선의 컨테이너 구성으로 얻은, 텃밭을 향한 동측 위아래 삼각형 모양의 창역시 자연채광이 풍부해지도록 돕는다. 외부에서는 컨테이너 하부로 덮여 그들이 생겨나는 휴게 데크를 제공한다.

2층은 6개의 사무공간이 아래층 아트리움이 내려다보이는 내부 발코니 형식의 복도로 나란히 이어져 창업·사무 활동 공간으로 쓰인다. 5개의 사무 공간은 열린 구획을 이루며 테라스와 함께 메인 홀을 둘러싸고 있다. 무중력시대 대방동의 운영주체를 위한 사무공간은 복도 끝에 위치하여, 관리자가 독립적인 공간에 있으면서도 내부 공간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트인 공간을 통해 충분한 자연채광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사용자와 방문자들의 시각적 연계를 추구하고 서로 간에 유대감을 증진시키도록 한 것이다.

©(주)경남주택도시건축연구소



상 편리한 이용 동선을 가진 구조  
중 1층 세미나실  
하 2층 테라스



상 1층 라운지에서 열린 공연 모습  
하 상승하는 형태로 뻗어 있는 무중력시대 대방동

## 컨테이너와 젊음, 두 가능성의 만남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세대로 전락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 청년층의 고민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치열하게 그 답을 고민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가의 방식으로 그 무엇에 대한 답을 무중력시대 대방동에 담아 보려고 하였다.

무중력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컨테이너의 활용이다. 이는 구조와 재료에 대한 건축적 실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친숙함과 대량생산 상태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본래 재활용 혹은 업사이클링의 개념이 강한 친환경적 순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술적·구조적·법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것이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컨테이너가 어떤 공간에 어울리고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무중력시대 대방동은 컨테이너 건축이 보여줄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도시 안의 유휴지와 결합하여 이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을 제시한다. 40피트 길이의 운송용 컨테이너 12개와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로 구성된 청년 종합활동을 위한 건축공간으로서 경제성과 가변성을 토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더불어 무중력시대 대방동은 건축적 아이디어, 청년들의 의지,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 등이 함께 만든 새로운 문화공간이다. 이곳이 사용자들의 에너지와 잠재력의 발현 속에 더욱 중요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중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 auri 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20

포럼 및 세미나  
126

연구소 단신  
128

연구소 신간 소개  
131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연구과제 소개

기본과제	과제책임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조영진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 및 정책개선	임현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윤주선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방안 연구	박성남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 분야 활용방안 연구	조상규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시설기준 개선 방향 연구	고영호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신치후
건축물 안전강화 규제정책 합리화 연구	김은희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이종민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김상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 분야 대응방향 연구	손동필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 체계 연구	김승남

## 기본과제

### ①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최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 안전 역시 건축물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이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범죄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일정용도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의 개정을 통하여 별도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도록 2015년 4월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현재 시행 중인 관련 고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경우 사유재산이며 공간적으로는 사적 영역에 해당되어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영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주·건축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인 영국과 일본에서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우수 건축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 범죄 안전을 위한 건축물 요소별 디자인 성능기준을 수립하고,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며, 범죄 안전 우수 건축물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건축물 범죄 예방 환경설계 선행이론을 검토하고, 국내외 건축물 성능제도와 사례를 조사·분석하며, 이를 종합하여 한국형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기준을 수립한다. 수립된 성능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우수 범죄 안전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축물 범죄예방 정책의 수립 및 정비에 물론 건축물 범죄예방 디자인 성능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요소별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 심의 등의 평가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진

## ②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 및 정책개선

최근 교육·문화·복지 등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 요구가 높아지고 지역민의 교류 중심으로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심의 경우 높은 지가와 신축 가능한 개발지의 부족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권 인근에 공공서비스 시설을 우선 공급하거나, 유휴 공공건축물을 주민 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민간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국공유재산 간의 상호 교환과 위탁 개발을 통한 시설의 복합 개발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사업 방식과 절차, 제도적 한계,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화 사업보다 매각 처분이나 단순 이용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추진 프로세스 및 지원 체계)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의 추진 원칙을 정립하고 사회적 효과를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공공건축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임현성

## ③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국비지원 도시재생 사업이 2014년 13곳에 이어 2016년 33곳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 지자체 사업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사업 추

진 체계가 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 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은 크게 '주체'적인 측면과 '주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시 공간적 제약으로 사업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 참여자가 한정된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은 행정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행정상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마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은 다양한 사업 주제를 장소 중심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앵커사업과 함께 저예산 단기간의 소규모 사업이 문화·경제·관광·도시건축·복지·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기존의 발주방식으로는 각각의 사업주체에 맞는 사업실행 주체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2010년대 들어 다수의 콘텐츠를 소량으로 공급하는 현대 사회의 추세에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O2O(online-to-offline)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경계 없는 참여와 소비자-공급자 간의 직접적인 연계 플랫폼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등 세계적 O2O기업의 가치가 각각 680억 달러와 25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에서도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직방' 등 O2O 서비스가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과 잠재력은 다양한 사업 주체와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와 주제 측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O2O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주선

#### ④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방안 연구

전국의 공·폐가는 약 79만 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장기 방치된 공·폐가로 인해 우범지대 양산 등 사회문제와 도시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 제정된 일본의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참고하여 2016년에 '빈집특별법(안)'을 입법할 계획이며, 3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 개량자금' 예산을 활용해 공·폐가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는 등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단계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 현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주거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 등 중앙정부 주도의 공·폐가 다발지역 재생 연계 사업과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부산시 '햇살둥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여건, 잠재력과 제약요소 등 지역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거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공·폐가 재생의 구체적 실행전략 및 수단 제시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공·폐가 재생 제도 기반 구축과 맞추어 쇠퇴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 특성, 쇠퇴 지역 인구 구성, 토지 이용 및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폐가 재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 지역 실증 연구를 통한 공·폐가 재생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공·폐가 재생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공·폐가 재생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재생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공·폐가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종합하여 국내 공·폐가 재생의 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성남

#### ⑤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분야 활용방안 연구

정부는 녹색건축 보급·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15년에 완료하고 운영단계로 전환하였다.

녹색건축정책의 출발은 에너지 및 환경정책이다. 나아가 녹색건축은 환경규제가 아닌 창조경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녹색건축 신산업 육성은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건물에너지 정보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는 이와 같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는다. 국가건물에너지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자료구조 해석 및 처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건물에너지 데이터는 건축물대장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연계성 정립이 필요하며,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건축물 현황정보는 공간정보화 등의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건물에너지 데이터 활용에 공공·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건물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처리기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국가건물에너지 데이터는 녹색건축정책의 성과평가, 부동산데이터와 연계한 건물에너지 성능 공개, 건물에너지 절감사업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사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처리기법을 적용하여 건물에너지 사용정보의 공공·민간 개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상규

#### ⑥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시설기준 개선 방향 연구

2014년 메르스(MERS) 사태와 같은 호흡기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과정은 국내 의료 인프라와 관련 기준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의료시설 내 집단 2차 감염은 부적절한 공조 및 환기설비 시스템, 격리병실의 동선 분리 미흡, 충분한 음압병실 및 음압유지시스템 미확보



등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호흡기 감염에 쉽게 이환될 수 있는 환자군이 증가하였고,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의료 시설 내 감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시설 계획기준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여러 부처의 법령에 혼재되어 있어 규정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미약하고, 호흡기감염병 질환을 고려한 시설계획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시설 계획기준 및 규정의 종합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흡기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의료시설기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에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경로 및 감염 관리체계와 국내외 의료시설 계획기준 및 현황,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 의료시설의 건축·설비 계획기준과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병원이라는 다중이용시설 성격의 건축물에 관한 특성과 이에 관한 건축계획 및 설비계획의 종합적 검토와 현장조사를 반영함으로써 의료시설 내 2차 호흡기감염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계획기준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개편을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시설 내 2차 호흡기감염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한다.

고영호

## 7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주거로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민간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에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나 검증되지 않은 지원 방법으로 인하여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약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한옥마을 조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옥마을 조성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은 현재의 분양과 관련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택지개발사업 관련 법, 분양 조건 및 절차 등이 현대건축물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한옥마을 분양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옥마을 조성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 지역 및 농산어촌지역과 같은 지역 특성이나 주거전용, 불특정 단독주택용지·집합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원형지와 같은 용지 특성과 더불어 용도지역, 지구계획 등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없이 획일화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전국적으로 비슷한 모습의 한옥마을을 양산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옥마을 조성사업 조성계획과 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성과 수요자 특성을 반영하는 한옥마을 조성사업 검토 및 계획 수립 방향과 지원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치후

## 8 건축물 안전강화 규제정책 합리화 연구

2014년 경주 마우리나 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등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건축물 붕괴사고의 경우 2010년 175건, 2011년 253건, 2012년 286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화재사고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4만 2,134건 중 2만 5,821건(약 61%)이 건축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15차례에 걸친 건축물 안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보다 근원적인 건축물 안전강화 정책 수립과 규제 실행의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조치 대안으로서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이미 실행 중인 정책 및 법제도 간 상관성 분석과 해당 규제에 따른 산업·경제적 영향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를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내용 및 정책적 대응방법과 관련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영향성을 조사·분석하며, 종합적인 정책으로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원인과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또한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근 시행 예정인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주요 규제의 주안점과 타 분야 상관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한 건축물 조성과 이용을 위한 패시브·액티브(Passive & Active)적 규제 체계를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건축단계별 규제 차별화를 통하여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향을 보다 원활히 하는데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타 분야 정책과의 유연한 관계 검토 속에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희

## 9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유휴공간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우범지대화 되는 등 지역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을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휴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공간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여 또다시 유휴공간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변화하는 공간이용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인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추구해 온 영구성(Permanence)과 하향식 계획과는

상반되는 전술적 도시론(Tactical Urbanism), 일시적 활용(Temporary Use) 등 자발적이며 일시적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유휴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주체별(소유자, 사용자, 공공 등) 역할을 정립하여 유휴공간의 일시적 활용의 제도화 방안과 실행 수단을 마련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민

## 10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어린이집은 0~5세의 어린이가 부모와 가정을 벗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교육기관이자 영·유아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2013년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3~5세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육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기능 보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이자 새로운 보육프로그램을 실현할 보육공간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면적 등 규모 기준, 안전 기준 등 특정항목에 대한 최소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 환경에 대한 정성적 지침은 설계용역 발주 시 개별시설별로 과업지시서상에 제시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급격히 확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조성체계 및 설계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기준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및 전문가 인식조사·현장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국공립어

린이집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 일관된 설계지침이 운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김상호

## 1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 분야 대응방향 연구

2015년 9월 25일 193개국 정상들이 모인 UN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 189개국의 정상들이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향후 15년의 개발목표이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과 및 비만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UN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과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 몇 년 동안 논의된 후 수립되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대 목표, 17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목표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장려’(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와 목표 11 ‘포용적인, 안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은 건축 및 도시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국내 현황 및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목표에서 국내 건축·도시 분야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 요소들이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적절한 미래예측 방법론을 통하여 예측하며, 이를 토대로 건축·도시 분야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손동필

## 12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 체계 연구

가로환경은 도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도시설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공간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가로기반 도시계획(Street-based Urbanism) 제도와 정책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제도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가로경관의 질적 수준 제고효과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현장중심’ 가로환경 평가 방식은 다양한 한계를 갖는다. 근본적으로 소수 전문가의 역량과 현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평가 대상지가 다수인 경우, 이를 동시에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중심’ 가로환경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상정보’ 기반의 가로환경 평가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가로환경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검토하고 관련 개념을 정립한다. 아울러 영상정보의 유형과 가로환경 평가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이는 크게 ①대표가로 선정 ②인터넷 가로뷰 서비스를 활용한 대표가로 사전조사 ③대표가로 현장조사 및 동영상 촬영 ④전문가 패널에 의한 대표가로(동영상) 평가 ⑤계량분석을 활용한 가로 특성과 가로 평가결과의 관계 분석 ⑥동영상 평가에 기반을 둔 가로환경 평가기준 정립 순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평가체계가 기존 평가체계를 실제 가로에 시범 적용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검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평가체계가 전문가에 의한 현장 중심 평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로환경 평가의 대상과 필요성의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전문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보완도구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승남

## 2016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사)한국 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2월26일, 서울 현대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함께 '존중받는 생로병사를 위한 환경적 모색: 출산환경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물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 경제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출산환경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선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존중받는 생로병사를 위한 환경적 모색'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출산환경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주제발표는 '임신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소영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보건의료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적절한 분배와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조영미 실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의료화된 출산환경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주제로 기존 병원 환경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여성의 권리와 출산환경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우성 소장(온고당 건축사사무소)은 산부인과 병원의 계보와 고급 산부인과 병원의 등장, 관련 전문 서비스를 위한 차별화된 공간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여성병원의 변천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선영 교수를 좌장으로 3명의 발제자와 김상호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장지인 교수(홍익대학교)가 패널로 참석하여 출산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사회적 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40여 명의 건설 분야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출산환경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출산환경의 현재를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백혜인

2016  
제1차  
지식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1월 29일 '중국 복건성 공동주택'이라는 주제로 2016년 제1차 지식강연회를 열었다.

지식강연회는 연구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구사례를 접할 수 있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비롯하여 '정부3.0교육', '연구윤리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등이 월별로 진행되고 있다.

강연자 최종현 소장(사단법인 통의도시연구소)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후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통의도시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강의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옛 사람 발길을 따라가는 우리 건축 답사1·2』(2010), 『남경에서 서울까지』(2012), 『오래된 서울』(2013), 『나무와 풍경으로 본 옛 건축 정신』(2013)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강연은 '중국 복건성 공동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강의 내용은 현장답사 때 촬영한 사진들이 활용되어 푸젠성(복건성) 토루를 접하지 못한 연구원들에게 그곳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적 건축양식과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번 제1차 지식강연회는 획일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유형과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동주택 양식이 개발된 중국의 사례를 이해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자리였다.

이소영

news



##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서울시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지난 1월 28일 서울시와 '한옥문화의 계승 및 한옥정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와 함께 현장기반형 한옥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한옥산업화를 위한 관·산·연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한옥자산 보전·진흥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2011년 5월 설립 이후 한옥지식 체계화와 정책 및 산업 지원, 한옥문화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2015년 7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센터로 지정되었다.

한편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2015년 9월 개소하여 현장 출동 한옥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한옥 교실·한옥캠프를 개최하는 등 한옥 보전과 한옥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센터는 한옥장인과 함께 한옥119 출동 및 실태 점검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교육홍보 등 한옥자산 보전·진흥과 관련한 서울시 시책개발 및 공동업무 진행에 상호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옥실태조사, 한옥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한옥수요와 건축동향 파악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한옥산업화를 위한 농림부·산림청 및 관련 산업체 등과 한옥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옥 현대화 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한옥장인·민간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자 입장에서 한옥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한옥과 관련한 환경·산업·건축방식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한옥주거지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경



\* 이미지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한옥에서 1박 2일, 27-28일 서울한옥캠프 개최”, 2015.11.2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웨덴  
민정위원회에  
한국 주택정책 소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과 2인의 부연구위원은 지난 2월 18일 주한 스웨덴 대사, 스웨덴 국회 민정위원회\*와의 회의에서 한국 주택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소개하였다.

스웨덴 민정위원회 위원장 캐롤라인 쉬베르(Caroline Szyber) 외 9인의 위원은 한국의 도시개발, 주택시장 관련 정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2월 14일 방한하였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한 스웨덴대사 안 회그룬드(Anne Höglund)와 함께 민정위원회 위원단과 만나 한국 주택시장의 흐름과 발전 방향, 정부의 주택 관련 시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익 소장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변화, 주택정책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뉴타운 개발사업과 서울 광역도시권의 형성 ▲주택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대한민국 고유의 전세 반전세 주택임대 시스템 ▲기업형 임대주택 프로그램 ▲주거급여 프로그램 등 관련 주요 이슈와 정부 시책을 설명하였다.

이후 한국 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스웨덴 민정위원회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스웨덴은 누적된 이민자와 국제난민 수용을 위해 현재 대형 주거지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국의 대형 아파트단지 개발과 아파트단지의 노후 관리 및 거주자 만족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가 소유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주거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의 전세·반전세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스웨덴 민정위원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국가의 건축·도시정책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고영호

\* 결혼·상업·토지 등 일반적 사법의 성격을 지닌 사건과 관련된 법률을 담당하는 스웨덴 민정위원회(The committee on civil affairs)는 주택정책, 토지개발계획, 건설 및 건축, 주택 제공 등의 분야를 다룬다.

## 건축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 운영 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규제 관련 의견 접수와 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을 할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2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는 지자체별 건축규제 정보, 규제개선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제출한 신고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의 검토를 거쳐 관련 부처로 전달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며, 신고자가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해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지자체 건축임의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현장 모니터링을 벌여 지자체 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2016년에도 모니터링과 심의제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소현



## 사진과 도면을 곁들인 일대기 『와본 김동현 구술집』 발간



남대문 화재사건,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등 최근 문화재 관련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문화재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관리 영역이 아닌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와본 김동현 구술집』은 우리나라 초기 문화재 발굴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하고자 기획되었다.

와본 김동현 선생은 법주사 팔상전과 봉정사 극락전 해체, 천마총, 황남대총, 황룡사 발굴, 불국사, 미륵사 동탑 복원 등 많은 설계 활동에 참여한 우리 건축문화재 보존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와본 김동현 구술집』은 전통건축연구모임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채록한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한옥센터가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일대기 형식으로 재편집한 책이다. 2007년 당시 구술채집에 참여한 김동욱 경기대학교 명예교수가 직접 해설을 맡았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가한옥센터에서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전산화한 사진과 도면 등 김동현 선생 개인 소장자료를 곁들여 더욱 풍부한 내용을 전달한다.

초창기 문화재 발굴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인물과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기대하며, 연구자 및 실무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한옥 외부설비 정비 가이드 『한옥 고치는 책 III』 발간

『한옥 고치는 책 III』은 한옥의 외부공간을 다룬 책이다. 주거는 다분히 사적인 공간이지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사유재이면서 동시에 공공재로 취급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한옥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외부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책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가운데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살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마당, 대문, 담장과 외벽, 배관 및 계랑기 등 외부설비의 4개 장으로 구성되며, 글보다는 사진과 도면을 중심으로 시공 전후의 모습을 수록하였다.

『한옥 고치는 책』은 2013년 제1권을 시작으로 올해 시리즈 완간을 맞았다. 『한옥 고치는 책』의 주요 독자는 한옥거주를 희망하는 국민들과 현재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한옥의 고유한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종래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통해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데 이 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박민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 2015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5-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공공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19,000원

AURI-기본-2015-2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5-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32,000원

AURI-기본-2015-4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5-5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5-6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31,000원

AURI-기본-2015-7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27,000원

AURI-기본-2015-8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18,000원

AURI-기본-2015-9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18,000원

AURI-기본-2015-10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28,000원

AURI-기본-2015-11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17,000원

AURI-정책-2015-1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12,000원

AURI-정책-2015-2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9,000원

AURI-정책-2015-3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10,000원

AURI-정책-2015-4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17,000원

AURI-정책-2015-5  
활용 가능한 국유건축물 유형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13,000원

AURI-정책-2015-6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향 11,000원

AURI-정책-2015-7  
건축물 옥상공간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9,000원

AURI-정책-2015-8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10,000원

AURI-협동-2015-1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26,000원

AURI-한옥-2015-1  
한옥 부분수선에 관한 거주자 면담 및  
점검 사례 연구 13,000원

AURI-한옥-2015-2  
목재수종 및 제재방법에 따른 단가변화  
연구 11,000원

AURI-한옥-2015-3  
한옥 공공건축물 발주절차 개선방안  
10,000원

AURI-보행-2015-1  
2014년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1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13,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2  
리모델링 설계 표준업무 설정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12,000원

## 2014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4-1  
생활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4-1-자료  
[별책]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 면접조사 9,000원

AURI-기본-2014-2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정책 연구 21,000원

AURI-기본-2014-3  
운동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4-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29,000원

AURI-기본-2014-5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32,000원

AURI-기본-2014-6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방안 연구 12,000원

AURI-기본-2014-7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마련 정책 연구  
14,000원

AURI-기본-2014-8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18,000원

AURI-기본-2014-9  
주거다양성을 위한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조성 정책 연구 30,000원

AURI-기본-2014-10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22,000원

AURI-정책-2014-1  
건축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 8,000원

AURI-정책-2014-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13,000원

AURI-정책-2014-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6,000원

AURI-정책-201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10,000원

AURI-정책-2014-5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4-6  
한옥의 효율적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4-7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11,000원

AURI-정책-2014-8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10,000원

AURI-협동-2014-1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 21,000원

AURI-한옥-2014-1  
현대 한옥기술의 변화와 전망  
29,000원

AURI-한옥-2014-2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  
개발 연구 (3) 19,000원

AURI-한옥-2014-3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연구 (1)  
16,000원

AURI-한옥-2014-4  
한옥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기준  
및 실행방안 연구 24,000원



AURI-한옥-2014-5  
한옥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 23,000원

AURI-한옥-2014-6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3) 22,000원

AURI-한옥-2014-7  
2014 한옥 통계 백서 12,000원

AURI-보행-2014-1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 (Ⅱ)  
19,000원

AURI-보행-2014-2  
2013 아마존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보행-2014-3  
2013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4,000원

### 2013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3-1  
보행중심도시 조성정책 및 제도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3-2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3-3  
가로단위 공간관리 수단으로서의  
특별가로구역 제도 연구 29,000원

AURI-기본-2013-4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리 정책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3-5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3-6  
도시공원 정책 수립을 위한 공원 평가  
모델 개발 연구 16,000원

AURI-기본-2013-7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25,000원

AURI-기본-2013-8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제도  
개선 연구 21,000원

AURI-기본-2013-9  
녹색건축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및 분석  
21,000원

AURI-기본-2013-10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28,000원

AURI-기본-2013-11  
한국도시의 경관경쟁력 평가 연구  
20,000원

AURI-기본-2013-12  
중소도시 쇠퇴지역 재생정책 합리화를  
위한 근린단위 연구 30,000원

AURI-정책-2013-1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AURI-정책-2013-2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8,000원

AURI-정책-2013-3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규모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8,000원

AURI-정책-2013-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8,000원

AURI-정책-2013-5  
여건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축사 제도 개선 8,000원

AURI-정책-2013-6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12,000원

AURI-정책-2013-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13,000원

AURI-정책-2013-8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13,000원

AURI-정책-2013-9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12,000원

AURI-협동-2013-1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1) 20,000원

AURI-한옥-2013-1  
한옥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목재비용  
산출 조사 연구 6,000원

AURI-한옥-2013-2  
기존 한옥 리모델링 시공과정의 사례  
9,000원

AURI-한옥-2013-3  
2013 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대구 및  
전주편 30,000원

AURI-한옥-2013-4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31,000원

AURI-한옥-2013-5  
2013 한옥건축산업 동향 14,000원

AURI-한옥-2013-6  
한옥 전문인력 교육 및 자격 인증방안  
연구 18,000원

AURI-한옥-2013-7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개발  
연구(2) 38,000원

AURI-한옥-2013-8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2) 20,000원

AURI-보행-2013-1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 (Ⅰ)  
33,000원

### 2012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2-1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 8,000원

AURI-기본-2012-2  
건축행정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건축통계 개선방안 연구 7,000원

AURI-기본-2012-3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16,000원

AURI-기본-2012-4  
도시공간개선사업의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2-5  
저층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17,000원

AURI-기본-2012-6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2-7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제도화 연구 11,000원

AURI-기본-2012-8  
상업거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방안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2-9  
소규모 주택사업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 제도 유연화 방안 연구  
12,000원

AURI-기본-2012-10  
SOC 시설의 복합적·일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2-11  
주거단지의 도시성 구현을 위한  
공간구조모델 및 제도개선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2-12  
장소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한 인터넷  
사진 정보 활용 방안 17,000원

AURI-정책-2012-1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AURI-정책-2012-2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한옥 보급  
방안 연구 10,000원

AURI-정책-2012-3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8,000원

AURI-정책-2012-4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2-5  
최근 한옥입주자 특성 및 한옥수요 조사  
연구 8,000원

AURI-정책-2012-6  
다세대주택의 규모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7,000원

AURI-정책-2012-7  
법적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  
7,000원

AURI-정책-2012-8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 연구 9,000원

AURI-정책-2012-9  
근린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향 연구 8,000원

AURI-정책-2012-10  
한옥학교의 운영실태 및 교육현황  
조사 연구 6,000원

AURI-협동-2012-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19,000원

AURI-일반-2012-1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1) 18,000원

AURI-일반-2012-2  
수요창출에 기반한 한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17,000원

AURI-일반-2012-3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개발  
연구(1)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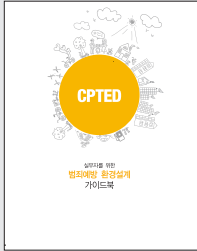
AURI-일반-2012-4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20,000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단행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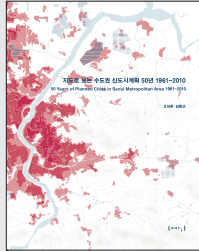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mailto:information@auri.re.kr)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 법무부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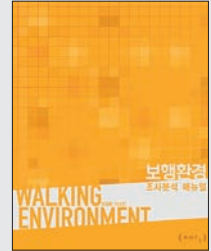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신도시계획 50년 1961-2010  
오성훈, 임동근  
20,000원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1  
오성훈, 남궁지희  
20,000원



보행도시  
오성훈, 남궁지희  
50,000원



보행환경 조사분석 매뉴얼  
오성훈, 이소민  
10,000원



건축·도시설계를 위한  
척도연습  
오성훈, 김원경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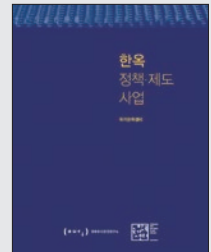
와본 김동현 구술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한옥 고치는 책 III -  
마당·담장·대문 그리고 외부설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한옥 고치는 책 II -  
주방·욕실·다용도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한옥 정책·제도·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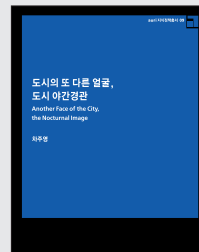
한옥 고치는 책 I - 대청과 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한옥 짓는 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옥상의 공간사회학  
전상인, 김미영  
7,000원



도시의 또 다른 얼굴,  
도시 야간경관  
차주영  
9,000원



황금빛 양동마을,  
그 풍경 속에 담긴 삶  
강동진  
10,000원

# 자료회원 가입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회원과 메일링서비스 회원에 가입하시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발간물들을 다양한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종류	받으실 자료	연회비
자료회원	당해연도 연구보고서 auri brief(격주간) 한옥정책 brief(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월간) 건축과 도시공간(계간)	개인 10만 원 기관 20만 원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자료우송료 연구소 부담)
메일링 서비스 회원	세미나 등 행사소식 안내 간행물 발간 안내	무료

## 가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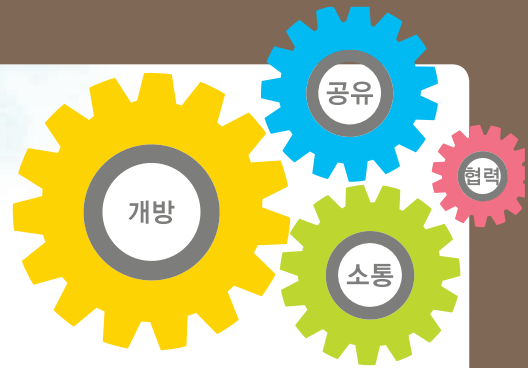
### 자료회원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 [참여공간] ▶  
[자료가입 안내]에서 신청,  
회원비 납입 확인 후 회원등록 완료

### 메일링서비스 회원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http://www.auri.re.kr)) [참여공간] ▶  
[뉴스레터]에서 신청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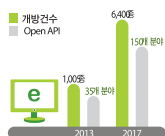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